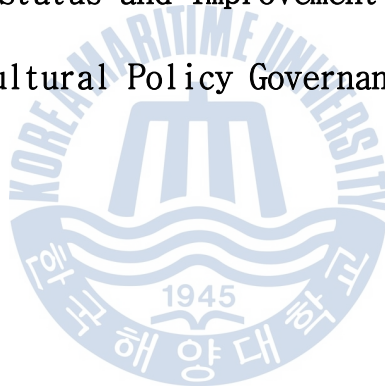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of Multi-Cultural Policy Governance in Busan



지도교수 김 상 구

2011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통상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성 은 혜

本 論文을 成恩惠의 行政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최 성 두 (인)

위 원 강 윤 호 (인)

위 원 김 상 구 (인)

2010 년 12 월 20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차	iii
Abstract	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2.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제 1 절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연구경향	7
1. 다문화주의의 개념	7
2. 다문화주의의 연구경향	14
제 2 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경향	19
1. 거버넌스의 개념	19
2. 거버넌스의 연구경향	23
제 3 절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성요소	27
1.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의 관련성	27
2.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성요소	31
제 4 절 변수의 설정과 설문지의 구성	33
1. 변수의 설정	33
2. 설문지의 구성	44

제 3 장 부산의 다문화 실태와 정책현황	49
제 1 절 부산의 다문화 실태	49
1. 국제결혼 현황	50
2. 결혼이민자 현황	51
3.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52
제 2 절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4
1.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의 현황	54
2.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62
제 4 장 부산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64
제 1 절 연구모형과 검증내용	64
1. 연구의 모형	64
2. 검증 내용	65
제 2 절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현황분석	67
1. 표본의 특성과 신뢰도분석	67
2. 다문화 지원서비스의 실태분석	73
3. 거버넌스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82
제 3 절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	90
1. 접근성 측면의 개선방안	90
2. 대표성 측면의 개선방안	92
3. 상호의존성 측면의 개선방안	92
4. 부합도 측면의 개선방안	93
제 5 장 결 론	9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95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97

참고문헌 99

부 록 108

< 표 목 차 >

<표 2-1> 다문화주의의 연구경향 19

<표 2-2> 거버넌스의 연구경향 26

<표 2-3>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비교 30

<표 2-4>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의 구성변수 39

<표 2-5> 변수의 선정과 측정지표 및 측정방식 45

<표 3-1> 부산광역시 국제결혼 현황(2009) 50

<표 3-2>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현황(2010) 52

<표 3-3>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07~2008) 53

<표 3-4>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10) 53

<표 3-5>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현황(2009) 5

<표 3-6>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별 예산(2010) 59

<표 4-1> 표본의 집단 구성 68

<표 4-2> 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9

<표 4-3> 실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0

<표 4-4> 측정지표의 신뢰도 검증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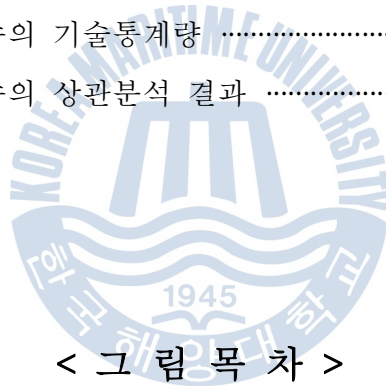
<표 4-5> 1차적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빈도분석 결과 74

<표 4-6> 1차적 접근 이유 빈도분석 결과 75

<표 4-7> 접근 경로 빈도분석 결과 75

<표 4-8> 기관 및 단체 방문 목적 빈도분석 결과 76

<표 4-9> 접근성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77
<표 4-10> 대표성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78
<표 4-11> 상호의존성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79
<표 4-12> 부합도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80
<표 4-13> 만족도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81
<표 4-14>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82
<표 4-15> 결혼이민자-실무자 간 t 검증결과	83
<표 4-16> 결혼이민자-실무자 간 대표성 측정지표 t 검증 결과	84
<표 4-17> 한국 거주기간별 집단 간 t 검증 결과	85
<표 4-18> 학력별 집단 간 F 검증 결과	87
<표 4-19> 자녀유무별 집단 간 t 검증 결과	88
<표 4-20> 거버넌스 변수의 기술통계량	89
<표 4-21> 거버넌스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90



<그림 4-1>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65
------------------------------------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of Multi-Cultural Policy Governance in Busan

Seong, Eun-hy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Maritim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the multi-cultures in order to cope actively with the multi-cultural society which is growing and to avoid conflicts that could be generated by transition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us making contribution to prepare the successful multi-cultural society in Busan.

There are many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typically due to a global trend which is incoming variety cultures through multiple paths. The multi-cultural policies are being implement since Participatory Government advocate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because the multi-culturalism can serve as new ideology of national unity in the pluralistic societies. The main target of the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female marriage immigrants, because 'culture' in context of the multi-cultures premise settlement and persistence as life style. Today's administration needs to strongly efficiency internally and democratization externally. If the 'Governance System' is efficient supply

of administration through network for variety participants on policy process, it can satisfy efficiency and democratization at the same time, so the governance system is required in field of multi-cultural policies. Especi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local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 level is operated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life of the local resident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Except for introduction(chapter 1) and conclusion(chapter 5), there are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multi-culturalism and the governance in chapter 2, the current status of the multi-culture of Busan in chapter 3,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multi-cultural policy governance in chapter 4. The research method carried out studying literature at first, searching the data at second, surveying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staffs of multi-cultural support organization(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and NGOs) at third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at surveys at last.

The variables of the multi-cultural policy governance that derived from precedent studies on the governance and the multi-culturalism are 'accessibility', 'representative', 'reciprocity', 'correspondence', 'satisfaction', and 'governance level'. On the basis of selected variables, it is expected that there exist perception gaps between th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staffs. And also the perception gaps among the marriage immigrants classified by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expected.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residence region, native country, Korean citizenship acquisition, residence time in Busan, age, educational background, presence of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excepting for participation that made problems on analysis process, don't exist perception gaps between th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staffs. It can be a precondition that is operated for the governance system profitably. And perception gaps are existed among the marriage immigrants classified by residence time,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esence of children. It means that they need different policies depending on above-mentioned characters. Each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multi-cultural policy governance, they need to identify mutual correlatio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high correlation between correspondence and reciprocity, between correspondence and satisfaction, and between correspondence and governance level. Therefore the core variable was corresponde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 suggest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in aspect of accessibility, representative, reciprocity, and correspondence. Above all, I suggest in terms of accessibility first, quantity growth aid for multi-cultural support organizations second, publicity of multi-cultural support organizations by multiple media third, making friendly atmosphere of multi-cultural support organizations. Next for improvement in terms of representative I suggest that make the marriage immigrants who adapted in new society and could stand on their feet work for other immigrants. For improvement In terms of reciprocity I urge to supply translation system of variety languages. Last, in terms of correspondence I suggest that investigate the policy preference of the marriage immigrants per cycle and make the policy direction which reflect on the result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다양성’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분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 지기도 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기도 한다. 물질적인 것의 다양성은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촉진할 만한 것이지만, 정신적인 것의 다양성은 그것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충돌할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해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다양성을 외면할 것인가, 동일화를 지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양성을 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다문화 담론을 이끄는 논제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에 대해 정책대상 집단을 공식적인 정책영역에 수용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편입(포섭, inclusion)과 배제(exclusion)로 구성한다거나(윌숙연, 2008:34), 정부나 주류사회가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주의를 자유주의적, 조합적(corporate), 급진적(radical)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關根政美, 1996:45-51; 강희원, 2006:10에서 재인용), 또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으로서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구분하는 것(김범수 외, 2007; 이성언·최 유, 2006; 박대식·최경은, 2008에서 재인용) 등이 그것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이문화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대상이자 주체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라 할 수 있다. 전자는 3D산업의 열악한 노동구조 속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한국 농어촌의 결혼수요를 충족시키고 한국인 2세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정책적·문화적으로 포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실제 참여정부 이래로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면서 이에 관련된 정책들이 정부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

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주의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2007:70)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Elabor-Idemudia, 2005에서 재인용)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써 새로이 유입된 이주민들을 융합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묘안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의 논의의 대상은 좁게는 이주자로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탈북자), 화교 등을 들 수 있고, 넓게는 성적소수자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주요 대상은 결혼이민자¹⁾가 되어 왔다. 이는 다문화에서의 ‘문화’라는 개념이 삶의 방식으로서 정착과 지속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은 뿌리 깊은 단일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맞서는 획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에만 그 대상이 국한되어 있다는 점, 정책과정에 대상집단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 한국사회에 대한 수용과 흡수만을 강조한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세훈(2006:467-468)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다양성과 통합 문제가 괴리된 점,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의 제한적 정책이라는 점, 내국인을 배제한 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점, 주류사회와 이질문화의 교류와 소통 측면을 간과하여 양자의 분리된 상황을 고착화시킨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거버넌스 제도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행정은 내부적으로는 효율화를, 외부적으로는 민주화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데, 거버넌스 체제를 다양한 참여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이는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 가능한 적합한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정책 분야는 국민일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포용과 인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이면서 약자인 이주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정에 반영시켜 정책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기 때문

1) 정부의 공식명칭은 ‘여성결혼이민자’인데, 결혼이주여성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결혼이민자를 여성결혼이민자의 뜻으로 사용한다.

에 정부주도적인 다문화정책을 넘어서 민·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관주도적으로 보는 견해(오경석:2007; 김희정:2007)와 시민주도로 보는 견해(윤인진:2008) 등으로 나뉘고 있지만, 앞으로의 지향점이 어느 한 부문의 주도에 의한 것보다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거버넌스(김선미:2009)나 정책공동체(김형수:2008)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차원은 이주민들의 현실적 삶과 연관된 문제로서 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 수준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승준(2009:276)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에 정착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인권보장은 물론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둘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다문화사업들을 추진하며 셋째, 지역공동체에 밀착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넷째,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조직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최근의 거버넌스 체계는 중국적으로 다층적인 구조를 지향하지만, 다문화정책에 관한 한, 결과적으로 보다 적실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수준의 로컬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이자 세계 제5위의 항만으로서 국내와 국외를 잇는 연결 통로이며, 이문화의 유입경로로서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부산광역시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문에서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의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실태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며,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 분야의 정책집행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이민자에 한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공식적인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자가 결혼이민자이며, 여기에서는 정부정책 범위 내에서의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이면서 이주민의 종합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연구와 부산의 다문화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된 후,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자인 결혼이민자와 관련 지원기관 및 시민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 서로 다른 개인적 특성을 가진 결혼이민자간의 인식차이검증을 통해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다문화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앞으로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간적으로 2010년 현 시점에서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실태와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문과 부산의 다문화적 실태부문, 그리고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실증적 분석부문이다.

먼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경향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현재의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경향과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며, 양자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위한 변수를 설정하고, 설문지를 구성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에 대한 탐색적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주요 요인이 되는 국제결혼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각은 보다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알아볼 것인 바, 여기에는 법적근거와 조직 및 인력, 예산 그리고 구체적 사업내용이 포함된다. 이후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미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후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지원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지원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각 변수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실무자 또는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다른 결혼이민자간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곳(남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과 각 자치구내 종합사회복지관(중구, 동구, 수영구, 강서구), 부산여성회 각 지부(영도지부, 동래지부, 연제지부), 동래구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사상구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부산진문화원, 서구여성센터, 금정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방문한 결혼이민자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관 및 단체의 성격은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여부와 지원수준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 구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실제로 시행되는 단계에서의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면접 조사는 향후 필요시 시행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과학적 연구방법으로서 경험적 자료분석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시행하는데, 다소 추상적인 용어들의 개념정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경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헌연구는 2000년 이후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법학, 행정학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가 되며, 구체적으로 행정학에서는 어떠한 경향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분류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읽고 분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다문화정책 분야의 거버넌스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변수를 선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실태와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계청 자료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이후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설문조사는 결혼이민자와 이들을 위한 지원기관 및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이 결과에 비추어 각 자치구와 나아가 부산광역시의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게 되므로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따른다. 이는 부산광역시에 속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분석단위와 해석단위의 불일치에서 오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의 특성과 신뢰도 분석, 척도의 타당성 및 기술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현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설문 문항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다른 결혼이민자간의 t-검정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 2 장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연구경향

1. 다문화주의의 개념

1) 목적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의 개념

(1) 다문화주의의 대두 배경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워낙 다의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용어가 대두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김희정(2007)에 따르면 정부가 다문화주의²⁾를 정책적으로 채택하게 된 데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내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화와 인종적 다양화의 문제이다. 즉,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의 고착화에 대한 해법으로서, 국제결혼과 그에 따른 혼혈 자녀의 증가로 인한 인종의 다양화에 대한 통합책으로써 다문화주의가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다문화주의가 세계적 추세가 되었고 그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한국도 다문화화를 사회통합의 이념과 정책으로 삼아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한 것(윤인진, 2008:83)을 들 수 있다.

즉, 2006년 UN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2007년 UN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인종차별철폐 조약과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심사한 뒤 “외국인과의 혼혈을 차별하는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는 권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압박, 그리

2) 김희정(2007)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실질적으로는 동화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이를 ‘다문화정책’으로 이름 붙인 이유로서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을 들어 설명한다.

고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 다문화주의가 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연구자(오경석, 2007; 김희정, 2007)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관주도적 다문화주의라 명명하였고, 이에 대해 다문화주의가 정책적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으므로 시민주도적 다문화주의라고 반문한 연구자(윤인진, 2008)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학계에서 혹은 여러 분야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다문화주의가 국가에 의해 채택되기 이전에도 지속해서 존재해 왔고 이러한 논의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적 요구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는 시민주도 혹은 학계주도적 다문화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가 완전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힘든 다문화사회의 진입기 혹은 이행기의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채택하고, 다문화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집행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관주도적 다문화주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어느 한 영역에서 주도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책과정상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유형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정립된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가 실제로는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 진단할 수 있고, 이로써 현실에 가까운 개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적인 모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자유주의·코퍼레이트·급진적·연방제·분리 독립 다원주의 유형³⁾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구견서(2003)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코퍼레이트 다원주의(corporate pluralist approach), 급진적 다원주의, 연방제 다원주의(ethnic federalism pluralist approach), 분리·독립 다원주의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는 사회 통합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에스닉 집단과 민족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시민생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분류방법인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첨가하고자 한다.

①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

앞서 언급했듯이, 다문화주의를 구분하는 유형의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법은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과 동화모형, 그리고 다문화모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유입국 사회가 경제적 영역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 및 시민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숙희, 2008:31-34; 김미나, 2009:198-200).⁴⁾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주류 문화로의 통합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다양성의 문제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포함되는데, 역시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이다(고숙희, 2008:31-34; 김미나,

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post)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 등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코퍼레이트 다원주의로 기회 평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 평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피차별자가 현실적으로 경쟁하는 데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소수민족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급진적 다원주의는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 살면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 등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 방식이나 생활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급진적 다원주의라고 한다. 넷째, 연방제 다원주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경우, 소수민족 집단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자치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다문화집단의 민족자결을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분리·독립 다원주의는 지역적으로 주변적인 마이너리티가 민족의 분리와 독립을 요구하는 논리로, 소수민족이 문화다원주의나 구조다원주의가 설정한 자치보다 큰 자치를 중앙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얻지 못할 경우 분쟁이나 대립을 일으키는 경우이다(구견서, 2003:40-44).

4) 이는 Castler & Miller의 모형을 인용한 것으로 고숙희(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 유형이라 하지 않고 국가관리모델이라고 한다.

2009:198-200).

다문화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symbiosis)에 둔다. 이는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할 수 있는데, 두 개념 모두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로 하는 조건과 실현 방법은 다르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국가는 문화적 단일성 보다는 민족적 혼종성,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채용한다(고숙희, 2008:31-34; 김미나, 2009:198-200).

② 다문화사회 형성과정별 분류와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유형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온 과정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유형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세계의 다문화사회 형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로서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를 들 수 있다. 둘째는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이질 문화, 종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형태로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있다(김미나, 2009:202-203). 한국의 경우 태동방식으로는 두 번째 유형의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EU국가 간 자유이동 및 EU시민권처럼 공통된 구심점이 없다는 점에서(차용호, 2009: 178) 이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데, 먼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포섭·배제 형식을 나타낸다. 특히 3D업종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자 중에서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외국인 남편에 대해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용하려는 방

향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는 동화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교적 전통이라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충돌의 문제일수도 있고, 외국인아내와 외국인남편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젠더적 문제일수도 있으며, 외국인아내보다는 외국인남편이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개방화와 관련한 문제일 수도 있다. 즉, 단순한 기준으로 현 상황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고,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보고, 그에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용호(2009:175-177)는 한국의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실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적응의 첫 번째 원인으로 결혼이민에 대한 종합적 정책개발의 부족과 외국모델 적용의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평등적 적용을 위한 다문화유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3)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같이 하여 부상된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확산과 다양한 인종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에서 국민통합 이념(ideology)으로서 등장했다(강휘원, 2006:8).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그 추상적인 성격 때문에 시대와 장소, 국가와 이념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 왔고, 그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한승준(2008:466-468)은 다문화주의를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는데, 첫째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로써 경제와 무역의 자유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자유경쟁능력이 없는 문화의 소멸을 막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이다. 둘째는 지역적 차원의 다문화주의 논의로서 유럽통합과 관련되어 다양한 민족의 이해증진과 의사소통의 원활을 통해 ‘다양성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셋째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로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 이민정책 및 이들에 대한 동화주의/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 따라서 국내적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다문화주의를 객관적 사회현상이나 특정한 사회구성원을 목표로 한 이념적 지향으로서, 다민족·다문화를 표방하는 정치 이데올로

기적 입장과 정부정책,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정의한다.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쓰임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의할 수는 없다. 다만 다문화주의의 논의에서 세계화와 이주민의 이동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고, 이를 위한 사회 혹은 국민통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듯하다. 이것이 다문화주의가 실질적으로 주류문화가 존재하는 한 비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주의는 소수문화의 유입에 대해 주류문화에의 통합의 의미로 이해되지만, 미래에는 다양한 문화의 인정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차별적 포섭·배제 혹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무조건적인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김범수 외(2007)는 다문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성의 상징적 인정 둘째, 법적인 인정과 다문화적인 공공정책 셋째, 소수집단의 정치적 참여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배려 등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대식·최경은, 2008:1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의 다문화사회 표방과 그 뒤를 이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다문화주의의 정책적 채택, 그리고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결혼이민자가 도의원에 당선⁵⁾되는 등의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다문화사회를 진입기, 이행기, 정착기로 설정했을 때 점차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를 확립해 가는 이행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정착기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인식의 전환 등의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수단으로서의 다문화정책의 개념

다문화주의가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국적으로 다문화주의가 목적으로 설정된다면, 다문화정책은 그 수단

5)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몽골출신 결혼이민자 이라(33)씨가 당선되었다(중앙일보, 2010.06.03)

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혜순(2009:614-615)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불명확하고 대부분의 연구자가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이주민정책 등을 혼용하여 쓴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원숙연·박진경(2009:867)은 다문화 정책을 다문화주의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통칭하면서, 주류 또는 다수집단과 다른 비주류 또는 소수자 집단의 차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으로 주로 이민자와 소수인종의 사회적 권리를 다루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장미혜(2008)는 여러 학자들의 다문화정책의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윤인진, 2008:73),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Taylor, 1992),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Tropper, 1999),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정상준, 1995:81),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하는 것(강희원, 2006)” 등을 지칭한다(한승준, 2008:70-71 재인용).

다시 김혜순(2009:623)의 언급을 보자면, 그는 한국에서는 담론과 현실이 전도되어 외국인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통용되고, 이는 또 다문화가족 대상정책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그 정체성이 명확한 것도 아니며, 남용되어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multiculture’보다는 ‘Damunhwa(korean multiculturalism)’로 쓰이는 것이 적절할 정도이므로 고유의 의미를 실종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차별적 포섭·배제의 성격과 동화주의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써왔고, 그러한 현실과 용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다문화주의의 실질적 의미와 다문화정책의 혼용성에 대한 논란은 이즈음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문화정책을 현 상황의 좁은 의미에서 ‘이문화 유입에 따른 다양성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감소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다문화주의의 연구경향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담론이 제기되면서 가히 봄이라 할 만한 경향을 보인다. 먼저 사회학 분야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리한 구건서(2003), 결혼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현황과 정책에 대해 연구한 설동훈(2006), 다문화와 민족-국가의 관계에 관한 이념적인 논의를 편 오경석(2007), 다문화주의 하에서의 인권에 관해 고찰한 진은영(2007), 한국인의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티즌십을 조사·분석한 최현(2007) 등이 있고,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여성학 시각의 김영옥(2007), 사회복지학 시각의 이광석(2009), 이경은·박창제(2007), 법학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률을 고찰한 이승우(2009), 조상균 외(2006), 이영주(2008), 다문화 도시에 관해 지역학적 관점에서 본 이해은(1998), 송도영(2008), 다문화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허남린(2009)의 연구 등이 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의적인 만큼 행정학에서의 연구경향도 다양한 갈래로 나타나는데, 먼저 다문화사회의 소수자정책에 대한 연구로서 진영평(2008), 최무현(2008), 원숙연(2008)의 연구 등이 있고,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이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서 원숙연·박진경(2009), 홍기원(2007), 김세훈(2006) 등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모형을 제시한 지중화·정명주·김도경(2009)의 연구가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영혜(2006), 양기호(2009), 호주를 중심으로 한

윤갑정(2004), 프랑스 동화주의의 위기에 관해 연구한 한승준(2008), 독일에서의 다문화지원정책을 고찰한 이용승(2007), 아시아지역과 다문화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범령령(2009), 최현실(2007), 김미나(2009), 주호진(2008)의 연구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구들도 다수가 존재하는데, 공무원의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지방정부의 과제를 제시한 권승(2008), 지자체의 다문화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한승준(2009), 강휘원(2007), 인천시를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을 거버넌스적으로 접근한 이종열·황정원·노지영(2008),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한 조석주(2007),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에 관한 양기호(2006)의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옥일·채경진·박광국(2009)의 연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적 시각, 즉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활발한데, 다문화 정책공동체를 제안한 김형수(2008),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국가주도인지 시민주도 인지를 논의한 윤인진(2008), 이러한 시각에서 이주와 다문화 실태 및 지원사업을 분석한 김선미(2009), 정부주도적 다문화정책의 장단점을 지적한 김혜순(2009),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수준을 분석한 한승준(2008)의 연구 등이 있다.

여러 사회과학적 담론 속에서 정책적 요구와 필요가 대두하고,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학제간 구분은 모호할 뿐더러 엄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선행연구의 영역을 좁히자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연구들과, 행정학 관점의 연구 중에서도 거버넌스 시각의 연구들이 될 것이다. 최근의 거버넌스 시각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한승준(2008)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를 진입단계, 전환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무(無)거버넌스, 부분적 거버넌스, 포괄적 거버넌스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진입단계에서는 무거버넌스 전략으로 다문화 정책들이 다소 중첩되더라도 경쟁을 통해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환단계에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조정, 총괄기구의 설립,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개발 및 역할 정립 등의 부분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정착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완성단계에 있고,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문화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가

므로, 초국가-지역-국가-지방-민간부문간의 역할정립과 조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체계 확립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단계에 따른 거버넌스 전략의 구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윤인진(2008)은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과 시민단체주도의 다문화활동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가 오경석 등(2007)의 주장처럼 ‘관주도’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고, 정책형성과정에서 코포라티즘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집행과정에서도 프로젝트 별로 민간단체로의 위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정책 네트워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김선미(2009)는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 국가발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인권 및 권익향상이라는 목적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합법적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까지도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두 주체가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틀을 제시한다. 먼저, 정부는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단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살려 이주·다문화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협력거버넌스 모델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원스톱서비스를 제안한다. 또한 이주자 체류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정착 프로그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계와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등의 중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김형수(2008)는 정책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소, 해당 분야의 전문가, 관련 지식과 정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 그리고 이들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 등을 꼽으면서 다문화 정책공동체는 기존의 계층제적 거버넌스나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를 탈피하여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 입장에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분야와 관련된 정책집단들에게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consultation)하고, 합의(consensus)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을 연계하여(networking)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에 대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는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객체수가 많고, 상호교류의 빈도가 높으며, 지속적이고,

자원과 권력이 수평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모델이 가장 적합하므로, 중국적으로는 그러한 모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외국인 이주자 중, 결혼이민자를 중점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본 연구의 토대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575,657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2%를 차지하고,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1.4%를 차지하여⁶⁾ 그 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함에도, 결혼이민은 노동이주와는 다르게 가족을 이루고, 2세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주요대상자가 되어 왔다. 결혼이민자 정책을 다문화 정책 혹은 다문화 가족정책으로 부르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물론 다문화 가족의 자녀까지도 포함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과 다소 중첩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 전략 즉, 문화동화주의 혹은 문화다원주의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고숙희(2008),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본 설동훈(2006), 이를 발전·정리한 설동훈(2010), 통합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통합방안을 살펴본 차용호(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후 복지의 필요성과 정책방안에 대해 제시한 김유경(2009),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이경은·박창제(2009), 다문화주의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고 결혼이주자의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결혼 이민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논의한 김영옥(2007) 등의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경은·박창제(2009)는 경상북도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방문지원사업의 경제성을 비용·효과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이 사업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증진과 부정적 정신건강 감소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 경제성 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김유경(2009)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폭력의 피해, 소득, 의료보장, 양육 등임을 밝혔고, 각각의 문제점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 제공과 가족대상 언어교육,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의 체

6)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

류 및 생활안정 보장과 전문상담제도,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확대와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강화, 의료비지원확대와 방문관리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부모와 자녀단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양육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차용호(2009)는 다른 연구들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정책이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여성인권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정체성 및 종합적인 이민정책적 시각에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 혹은 유럽 국가들의 성격과는 다른 다문화적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맞춘 한국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지나치게 단순‘지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 및 자립유도형’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다문화주의 연구가 다양성 인정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국가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 연구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고속희(2008)는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가관리모델을 Castles & Miller의 동화주의(assimilationist model), 다원주의(multicultural or pluralist model), 차별적 포섭/배제(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모델을 인용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들은 다원주의 보다는 동화주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력과 출신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국의 상황은 외국인이민자들이 적응단계로써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동화주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주의에 입각한 적응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다문화주의의 연구경향

구분	연구자	
사회학	구건서(2003), 설동훈(2006), 오경석(2007), 김희정(2007), 진은영(2007), 최현(2007)	
여성학	김영옥(2007)	
사회복지학	이경은·박창제(2007), 이광석(2009)	
법학	조상균 외(2006), 이영주(2008), 이승우(2009)	
지역학	이혜은(1998), 송도영(2008)	
교육학	허남린(2009)	
행정학	소수자정책	전영평(2008), 원숙연(2008), 최무현(2008)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김세훈(2006), 홍기원(2007), 원숙연·박진경(2009), 지종화 외(2009)
	외국사례 연구	윤갑정(2004), 한영혜(2006), 최현실(2007), 이용승(2007), 주호진(2008), 양기호(2009), 한승준(2009), 범령령(2009), 김미나(2009)
	지방정부 관점	양기호(2006), 강휘원(2007), 조석주(2007), 권승(2008), 이종열 외(2008), 한승준(2009), 김옥일 외(2009)
	거버넌스 관점	한승준(2008), 김형수(2008), 윤인진(2008), 김선미(2009), 김혜순(2009)
결혼이민자 대상	설동훈(2006), 김영옥(2007), 고숙희(2008), 김유경(2009), 이경은·박창제(2009), 차용호(2009), 설동훈(2010)	

제 2 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경향

1. 거버넌스의 개념

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라는 개념 또한 다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행정연구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도그마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 개념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박상필, 2002:418).

따라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유형별 분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초점 혹은 분류기준 또한 범위별(최광의·광의·협의), 접근시각별(국가중심·시장중심·시민사회중심), 수준별(글로벌·리저널·내셔널·로컬)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명석(2002)은 ‘거버넌스의 개념화’라는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정의를 최광의, 광의, 협의의 차원에서 논하고 있는데, 먼저 최광의의 거버넌스는 ‘공통문제의 해결기제’로써 조직·사회체제·국가 전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나 시장,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칙에 의한 지배 혹은 조정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약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셋째, 협의의 거버넌스는 신(新)거버넌스(new governance)로서 정부 이외의 기관/행위자의 광범위한 포함, 불분명해지는 정부와 민간사이의 경계와 책임소재, 집합적 행동문제와 관련된 상호의존적 관계, 자율적인 자치 네트워크, 정부의 공권력/명령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해결능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이다(이명석, 2002:322-326).

김석준 외(2002)는 거버넌스 이론을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는데, 국가중심적 거버넌스는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제기되는 분석틀로써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써 민간기법의 정부에의 도입 등이 주가 되지만 여전히 정부가 중심적 행위자가 된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는 경제학에서 주로 논의되는데 시장 원리에 의한 시장실패의 대안을 제시한다. 즉, 가격을 매개로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의 도입 그리고 경쟁적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논의이다. 사회중심적 거버넌스는 사회학과, 시민사회론의 발전으로 대두된 논의인데,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직화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논의한다(김석준 외, 2002:15-47).

한편, 거버넌스를 범위적 수준별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지역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국가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 등의 유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로써 국가간 협력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이고, 지역 거버넌스는 인접국가간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거버넌스는 개별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고,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며, 사이버 거버넌스는 가상공간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다(최성욱, 2004:239-261).

학자들마다 위의 세 가지 기준을 개념정의, 유형분류, 범위와 수준분류 등으로 조금씩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지만, 이들 모두 거버넌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쓰일 거버넌스 개념을 탐색하자면, 먼저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 현황연구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써 광의의 거버넌스에 해당되고, 주로 민관의 협력관계를 보기는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하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논의되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 해당되며,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로컬 거버넌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는데,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병수 · 김일태(2001:30)는 거버넌스를 ‘정부와 정부 외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 시장이 상호의존적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할 때 선의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방식 혹은 조정양식’이라고 정의하고, 김명숙(2005:327)은 ‘거버넌스란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 (기업, 시민단체, 일반시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 속에서 토론 및 협상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는 정치과정이다(이명석, 2002: 321-338; Peters, 2000; Stocker, 1998: 17-28)’라고 정의한다.

염일열 · 설성현(2003:302)은 ‘거버넌스란 과거처럼 관료들이 일방적,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이해관계자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NGO,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며, 이현출(2001:219-220)은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짐으로써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거버넌스의 개념정의에서 공통적 속성의 핵심은 ‘정책과정에서의 다양한 참여자와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문제의 협력적 조정과 해결’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도 거버넌스를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기로 한다.⁷⁾ 이러한 거버넌스 정의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로서의 다양한 참여자, 방법으로서의 협력과 네트워크, 목적으로서의 공공문제의 조정과 해결이다.

먼저, 다양한 참여자에는 기존의 의사결정자인 정부, 민·관의 경계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대두된 시민사회단체이다. 이 삼자 외에도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정책대상집단도 매우 중요한 참여자라 할 수 있는데, 정책과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저항과 불응 등의 비용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협력과 네트워크에는 참여, 의사소통, 상호의존, 신뢰, 대화, 타협 등의 개념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방적, 명령적, 정부주도적인 의사결정방법에서 탈피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민·관의 관계라 함은 비공식적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거버넌스에서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가능할 것인데, 여기에는 공개를 통한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하는 순수공공재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계되어 이의 조정과 해결에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안을 말한다. 이때 조정

7)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네트워크, 파트너십이라는 용어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Peters(1998)는 파트너십의 특징으로서 두 사람 이상(그중 최소 하나는 공공영역인)이 행위자로 참여하고, 이는 거버넌스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 네트워크는 이보다 넓은 개념인데, 정부 능력의 한계를 여타 행위자들과 연계관계 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거버넌스의 지향점인 ‘조정’의 논리를 담고 있다(김형양,2005:17-37). 거버넌스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3자이상의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와 기업, NGO간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단계에서 정책대상자와 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실무자, 그리고 이와 경쟁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NGO의 실무자 등 3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의의 거버넌스로 파악하여,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로 보고자 한다.

과 해결이라는 용어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국한되는 인상을 받기 쉬운데, 여기에는 정책의 공급이라는 측면도 포함하여, 거버넌스에서는 정책 전 과정에서 새로운 기제가 도입됨을 의미한다.

2. 거버넌스의 연구경향

거버넌스의 개념논의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다양한 참여자’이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논의대상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대두된 NGO(시민사회단체)⁸⁾이다. NGO에 대한 연구는 대략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는데 첫째, NGO에 대한 개념정립적 연구 둘째, NGO 부문의 역량 혹은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셋째, 정부와 NGO의 관계에 관한 연구 넷째, NGO의 정부지원에 관한 연구 다섯째,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혹은 참여에 관한 연구 등이다(김상구·최병대, 2003:124). NGO는 거버넌스의 개념적 구성요소로써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 번째의 정부와 NGO의 관계에 관한 연구나 다섯 번째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혹은 참여에 관한 연구는 거버넌스의 연구경향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즉, 거버넌스의 참여자로서 NGO에 관한 연구를 첫 번째 거버넌스 연구경향으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과정에서의 NGO역할에 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최병대·김상구(2004)의 연구,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관한 김상구·이원일(2005)의 연구, NGO연구의 경향에 관해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김준기·김정부(2001)의 연구, 환경분야 NGO와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정관리(governance)와 NGO역할에 관한 김종래·강제상(2000)의 연구,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를 위한 정부와 NGO관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강명구(2000)의 연구,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일원으

8) NGO에 대한 개념은 문화권이나 각국의 전통에 따라서 NGO, NPO, VO, CSO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같은 용어임에도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어임에도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등 개념상의 혼재가 있다. NGO에 대한 개념정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정부의 개념에 상응하는 시민단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로 참여한 역할과 한계를 고찰한 이현출(2001)의 연구, 민주주의의 재구축을 위한 거버넌스의 관계와 이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한계에 관해 논한 박상필(2002)의 연구, 전남 공익활동지원사업참여 NGO에 대한 파트너십을 분석한 복문수(2005)의 연구 등이 있다.

거버넌스 정의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협력과 네트워크인데, 여기에서 참여, 의사소통, 상호의존, 신뢰, 대화, 타협 나아가 투명성이나 사회자본 등의 관련된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거버넌스 두 번째 연구경향은 이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관련 개념들과 거버넌스간의 영향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 때 거버넌스는 독립변수가 되기도 하고, 종속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의 관계를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의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박희봉·김명환(2000)의 연구, 지방정부와 NGO간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조건에 관해 의정부시 공무원과 NGO활동가들의 의식, 태도,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병수·김일태(2001)의 연구,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거버넌스 구성변수를 도출하고,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의 NGO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거버넌스 형성정도와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김형양(2004)의 연구, 도시거버넌스의 구축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신공공성의 관점에서 시민사회론과 파트너십론의 개념요소를 적용하여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있는 김순은(2006)의 연구, 의정부시의 미군반환기지 활용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 김환철·김세훈(2007)의 연구,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숙중·김희경·최준규(2008)의 연구, 거버넌스 구조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비교분석한 김인(2006)의 연구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문제의 조정과 해결이라는 거버넌스 개념 요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경향인데, 여기에는 어떤 공공문제를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기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먼저 거버넌스 이론을 프랑스의 ‘계약계획’제도에 접목하여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한승준(2004)의 연구, 일본의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과 한계요인을 지적한 민현정(2009)의 연구, 의정부시의위원회 활동을 통계적으로 검증

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한 박성훈·임승호·김종술(2008)의 연구, 정읍시의 방사선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력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해 논의한 김용민(2010)의 연구, 충청권의 비선호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갈등사례를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시각으로 분석한 권경득·임정빈·장우영(2004)의 연구, e-거버넌스 분야의 문신용(2009)의 연구, 규제거버넌스 분야의 전영평·장임숙(2004)의 연구, 복지거버넌스 분야의 이도형(2004)의 연구, 환경거버넌스 분야의 홍성만(2004)의 연구 등이 있다. 선행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거버넌스 적용의 사례들은 대부분 행위자간의 갈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로써 이 연구들은 갈등관계에 있는 공공문제의 해결에 거버넌스적 시각이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거버넌스 연구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차원이 로컬 거버넌스인데, 이는 아마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참여’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지방정부차원에서 더욱 절실하면서도 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는 결국 시민자신의 문제일 때 가장 강력한 행동을 유도하고, 그 효과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 차원의 연구들도 다소 중첩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연구경향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에는 거버넌스 차원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이와 주민의 정치참여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김명숙(2005)의 연구, NGO에 대한 지역·분야·역량 등을 파악하고 로컬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차지발전을 위한 지역NGO의 역할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는 최진혁(2004)의 연구, 다양한 시민참여의 유형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박희봉(2006)의 연구, 지방분권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으로서 로컬거버넌스 도입방안을 강구한 오재일(2004)의 연구,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그리고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관계를 논의하고, 민주적 로컬거버넌스로의 개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에 관해 분석한 신희영(2005)의 연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의 대두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거버넌스의 개념정의에 관한 연구들과 방법론적 해석, 그리고 실제적 적용·한계와 같은 이론적 연구경향을 들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한 이명석(2002)의 연구, 지방거버넌스의 형성론과 현실의 방법론에 관해 논하고 있는 이종원

(2003)의 연구, 거버넌스에 관해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이종원(2005)의 연구,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이 거버넌스보다는 여전히 정부패러다임이 지배적이라는 실제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유재원·소순창(2005)의 연구, 이와 유사하게 신거버넌스 논의에 관해 이론적·실제적 한계를 프랑스의 지자체간 연합체 분석을 통해 연구한 한승준(2007)의 연구, 앞에서 살펴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경향들을 신거버넌스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최성욱(2003)의 연구, 거버넌스 연구경향과 현재적 쟁점을 파악하고 있는 라미경(2009)의 연구 등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분야의 거버넌스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를 선정할 것인바, 두 번째 유형인 관련 개념요소들과 거버넌스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그 토대가 될 것이다.

<표 2-2> 거버넌스의 연구경향

거버넌스 연구경향	연구자
거버넌스의 참여자(NGO)	최병대·김상구(2004), 김상구·이원일(2005), 김준기·김정부(2001), 김종래·강제상(2000), 강명구(2000), 이현출(2001), 박상필(2002), 복문수(2005)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박희봉·김명환(2000), 이병수·김일태(2001), 김형양(2004), 김순은(2006), 김환철·김세훈(2007), 이숙중·김희경·최준규(2008), 김인(2006)
공공문제의 조정과 해결	한승준(2004), 민현정(2009), 박성훈·임승호·김종술(2008), 김용민(2010), 권경득·임정빈·장우영(2004), 문신용(2009), 전영평·장임숙(2004), 이도형(2004), 홍성만(2004)
로컬 거버넌스	김명숙(2005), 최진혁(2004), 박희봉(2006), 오재일(2004), 신희영(2005)
이론적 연구	이명석(2002), 이종원(2003), 이종원(2005), 유재원·소순창(2005), 한승준(2007), 최성욱(2003), 라미경(2009)

제 3 절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의 관련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정책 분야가 관주도인가(오경석, 2007; 김희정, 2007) 시민주도인가(윤인진, 2007)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몇몇 연구자(김선미, 2009; 윤인진, 2008; 박대식·최경은, 2008)들은 현재의 다문화주의를 어느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정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를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구현을 목표로 체류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대상으로 외국적 동포와 결혼이민자·외국인여성·외국인자녀, 난민, 외국인근로자, 미등록외국인 및 국민이다. 주요추진방향은 외국인의 인권존중 및 사회통합과 함께 우수외국인 인력유치도 포함되며,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있다. 그러나 미등록외국인의 배제, 획일적 정책, 중복투자과 단기적 지원, 단일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이주자들이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주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주체가 된다. 정책대상은 합법적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외국인도 포함하며, 추진방향은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 및 관용성을 증진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축제와 권익증진, 인권보호, 역량강화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도권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재정, 인력, 시설 부족으로 내실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고, 정부감시자로서의 NGO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현실가능성이 결여된 진보적 주장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다문화의 성장과 함께 그에 반대하는 인식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사회 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확립할 수 있지만, 미등록외국인이 배제되고, 정책대상집단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공급이 어려우며, 정책이 중첩되며, 지나친 통합의 강조로 인한 다양성이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들의 인권과 다문화공생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대신에 재정과 인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급의 불확실성과 지나친 급진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있어서 거버넌스 체계 즉,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인 정부와 시민사회 및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와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문화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의 조정과 해결, 그리고 협력적 공급이 중요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의 지속성과 체계성 및 사회 통합의 측면을 충족시키면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보편적 인권과 다양성 존중의 측면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을 낳기 위해서는 다문화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거버넌스의 주체와 이들간의 상호관계, 거버넌스의 대상 영역, 거버넌스의 방식 및 규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 거버넌스에서 주체는 다양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데, 기존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책대상집단인 결혼이민자,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대상영역은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다문화정책 분야가 될 것이다. 방식과 규칙에 대한 논의는 부산광역시 다문화 가족지원조례의 제4조(민간단체 지원)와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특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를 명시하여, 정부와 외부인사(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간의 네트워크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공기관(4), 시의회(1), 외교계(1), 시민단체(2), 학계(2), 법조계(1), 경제계(2), 문화계(2), 연구기관등(3)

소속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단체·기관·전문가 그룹과의 효율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운영방안을 협의하며 셋째,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지역 공동체 형성과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협의 둘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행정지원 방안 협의 셋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대책 및 후원회 구성 지원 넷째, 세미나·포럼 개최 등 기관, 단체별 효율적 역할(사업) 분담 다섯째, 실무분과단 특화사업 협의 조정 및 평가 등이 있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2008년 11월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09년 9월에 회의 1회와 1월과 4월에 각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민간 공모사업 심의를 위한 서면심의 2회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도 2월에 회의 1회와 3개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 심의 1회가 이루어졌다.⁹⁾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와 그들간의 네트워크에 따른 다문화 영역에서의 정책심의라는 점에서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존재로써 다문화정책 분야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및 새터민 등 다문화정책 대상집단의 대표자가 배제되었다는 점, 정책과정에서 결정 효력이 없는 심의기구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에서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관련 대상집단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9)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외부송부용에서 발췌.

<표 2-3>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비교

구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목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구현: 다양한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 하고,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문화를 이해·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열린사회 구현	내국인과 이주자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감(다문화공생)
행위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정책목표대상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여성·외국인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¹⁰⁾ , 국민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
주요추진방향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우수외국인력 유치	외국인의 인권 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결혼이민자가족의 역량강화
주요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다문화축제, 권익증진, 인권보호,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외국인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불법체류자 배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정부기관 간 중복투자와 단기적 지원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인력, 시설 부족으로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

출처: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보고서(박대식·최경은, 2008에서 재인용)

15) 일각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인권을 고려해 ‘불법(illegal)체류자’라는 용어 대신에 ‘미등록(undocumented)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용시에는 원문 그대로 쓰고, 가능하면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용어로 쓰고자 한다.

2.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성요소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분야에서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로 명명하고자 한다. 앞서 다문화정책은 ‘이문화 유입에 따른 다양성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감소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하였고, 거버넌스는 ‘정책과정에서의 다양한 참여자와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문제의 협력적 조정과 해결’로 정의한 바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에는 거버넌스에서 말하는 공공문제에 다문화정책을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는 대상으로서의 다문화정책과 방법으로서의 거버넌스로 구성되며, 간략하게 ‘다원화된 사회의 통합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과정에 다양한 참여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협력적 조정과 해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이러한 개념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한 참여자’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정에 비해 현대의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부문과 비정부 부문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벽이 낮아진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탈경계를 위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정부와 비정부간의 교점(交點)에 대한 제도적 마련까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접근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다양한 참여자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써 참여자의 접근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하나의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정부와 대응하는 참여자로 NGO를 들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NGO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대상집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정책일수록 정책대상집단은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의사소통 및 국적취득여부 등의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자가 필요하다. 이를 ‘대표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 정부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대표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개념의 핵심적 구성요소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조정’이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란 다양한 참여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연결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전통적 행정방식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공문제의 해결과 공급에 있어서 신뢰와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과 관련된 문제로써 ‘상호의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협력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나 혹은 이해관계자 등 대표성을 가진 참여자들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상호의존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성은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말하는 ‘조정’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그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는 ‘조정과 해결’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의 해결은 정책의 결과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 정책과정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대상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가는 정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정책 분야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분류하는 유형에 차별적포섭·배제모형과 동화모형, 그리고 다문화모형이 존재하는데, 정책대상자인 결혼이민자들의 선호와 관련하여서는 차별적포섭·배제모형을 제외할 수 있다. 즉, 다문화정책의 선호방향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압축할 수 있다. 정책의 방향이 양자 중 어느 쪽이며, 정책의 수혜집단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는 ‘부합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또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여러 척도가 사용되지만,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는 정책의 지향점이 두 가지로 나뉘고 양자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합도가 중요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 결과적 측면에서 정책과정에서 협력적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로 ‘만족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또한 하나의 정책방식으로써 그것이 가진 효과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하나로써 정책대

상자의 만족도를 꼽을 수 있다.

요컨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참여자’측면에서 접근성과 대표성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에서 상호의존성을, ‘조정과 해결’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부합도와 만족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상호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는 변수로써 활용할 수 있다.

제 4 절 변수의 설정과 설문지의 구성

1. 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초점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공급에 있다. 다문화가족지원협회가 다문화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결정과정으로 환류하여 보다 진전된 다문화정책이 결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조사의 참여자는 정책대상집단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다문화지원센터 및 관련 NGO의 실무자와 정책대상집단이자 이주의 주체인 결혼이민자로 설정한다. 기존의 거버넌스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와 NGO의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집행과정상에서 실질적 참여자인 결혼이민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협력관계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변수의 도출을 위해서 기존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박희봉·김명환(200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능력 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초구와 포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Putnam(1993a/ 1993b/ 1995a/ 1995b/ 1996)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람들이 협동한다면 사회가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라고 한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공공선을 성취하기 위해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및 집행의 일상적 과정에서 일련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및 다른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와 영리기관들이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기본 가설은 규범, 신뢰, 시민참여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협동적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능력을 개선시키며, 시민 요구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협력적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의사소통 채널과 정부의 역할, 지역사회 규범 및 신뢰의 순서로 영향을 받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5%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행정대응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수·김일태(2001)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로서 ‘자율성(autonom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협력(cooperation)과 조정(regulation)’, ‘네트워크(network)’ 등으로 들고 있다. 측정지표는 관변단체를 제외함으로써 ‘자율성’을 제외하였고, ‘상호의존성(reciprocity)’, ‘신뢰(trust)’, ‘협력과 조정(partnership & adjustment)’, 그리고 ‘네트워크’의 네 가지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는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조건으로서 관계행위자인 의정부시 공무원과 NGO활동가들의 ‘의식, 태도, 경험’의 주관적 거버넌스 능력과 ‘제도적 장치’로서 객관적 거버넌스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로 측정되었다. 분석결과 ‘상호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고, ‘신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NGO활동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협력과 조정’에서 협력의 경험부재와 특정분야의 편중문제가 나타났고, ‘네트워크’의 역할은 형식적인 것에 그쳐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과 NGO활동가들 간에는 상당한 인식 간극이 존재하여,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양(2004)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분야 및 환경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고,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구성변수로서 정책과정의 참여(토론회, 위원회 참여정도), 정부의 참여보장과 정보의 공개, 신뢰와 대화(양자간의 신뢰정도, 의사소통정도), 네트워크(파트너십), 정부의 NGO에 대한 인정(의견수용정도, 역할인정), NGO의 자율성, NGO의 외부역량, NGO의 주민대표

성(시민대표성, 이해대변정도), NGO의 내부역량, 정부의 지원 등 총 10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거버넌스 형성 정도’는 공무원과 NGO활동가 양 집단 모두 보통 이하로 응답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NGO의 주민대표성,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 정책과정의 참여, NGO의 내부역량의 순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의 참여보장과 정보 공개, 정부의 NGO에 대한 인정, 지원 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신뢰수준에서는 신뢰와 대화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최병대·김상구(2004)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인 NGO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과정별로 각 역할변수를 도출하여, 관련 공무원과 NGO활동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건설사례와 부산시 명지대교 건설사례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정책과정별 변수에 대한 각 집단 간의 인식차이와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각 변수를 살펴보면, 의제설정 과정에는 공익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공익문제에 대한 여론형성 및 주도, 정치인 및 관료에 대한 공공의제 제시가 선정되었고, 정책형성과정에는 시민의 이해표출과 집약,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 이해집단간의 이해와 갈등의 조정이 선정되었다. 정책결정과정에는 전문지식과 자문의 제공, 토론회·청문회의 참여, 정책결정집단에 대한 압력행사가 선정되었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과정에서의 수정 및 보완요구, 축소 및 폐지 요구가 선정되었으며, 정책평가과정에서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정책오류의 수정 및 변경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투입하려는 시도 등이 선정되었다. 분석결과 정책과정에서 수행역할 책임이 있는 집단은 변수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수행책임이 없는 집단은 상대방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NGO의 정책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공의제 제시, 이해와 갈등의 조정, 토론회·청문회 등의 참여, 정부의 책무성 추궁, 정책오류의 수정 및 변경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재투입하려는 시도 등으로 나타났다.

김명숙(2005)의 연구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규모(최저의사결정 단위), 민주성, 책임성, 합리성의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별하여, 주민의 정치참

여와 관련하여 로컬 거버넌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척도는 최저의사 결정 단위로는 주민 혹은 지방정부, 민주성은 개방성과 참여기회, 정보제공, 책임성은 정책결정시 욕구반영, 의견수용, 정책집행시 욕구반영, 합리성은 참여자(시민, 선출직 대표, 공무원)들의 의견표명, 토론, 조정·통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의사결정단위 차원은 주민보다는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성 차원은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의 절반에도 못 미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을 압도하여 주민욕구가 정책에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성의 차원에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두 배로 나타나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민의 정치참여 유형은 ‘지역문제 해결활동, 공직자 접촉, 항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실태조사결과 모두 평균점이 3점에 미치지 못하여 활발한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 거버넌스 차원과 주민의 정치참여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규모는 지역문제 해결활동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민주성과 책임성 및 합리성은 각각 공직자 접촉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문수(2005)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파트너십을 설정하고, 이를 ‘정부와 시장에서의 기업, 그리고 비정부부문(NGO)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가 각 정책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국정운영방식의 한 형태’라 정의한다. 시민적 정당성이란 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현재적·잠재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올바른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시민적 정당성을 지닌 NGO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시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요건은 먼저, 조직 내부 요인으로서 도덕성,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을 들 수 있고, 조직 외부 요인으로서 사회 미성숙성, 시민참여성, 재정자립성, 목적성을 들 수 있다. 조사는 NGO활동가에 대한 인식조사로 이루어졌고, 참여성은 회원수로 측정하였다. 전라남도에 있는 NGO들의 시민적 정당성 검증에 위한 인식조사 분석결과, 대체로 전남지역의 NGO의 시민적 정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성이 가장 취약했고, 참여성,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 목적성 순서로 높아졌다. 참여성의 경우 평균 회원 수는 4,729명이지만, 200명 미만의 소규모 NGO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재정 자립성과 자주성에 영향을 미쳐 정부

로부터 포섭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김인(2006)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거버넌스의 핵심적 하위변수로 참여의 자율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각 측정지표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율성 수준은 자발적 참여와 자주적 의사표현 둘째, 협력과 조정정도는 지속적 대화 및 설득과 상호 신뢰성 셋째, 네트워크 구축정도는 위원회 참여정도와 상호연계망 구축이며, 세 가지의 측정치는 거버넌스 수준이 된다. 통제변수로 서비스 관료제의 특성과 도시정부의 특성이 있으며, 종속변수로는 성과가 측정되었는데, 정책의 유형은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와 주차서비스 성과, 환경보호서비스 성과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 수준은 환경보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차서비스의 순서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 구조의 하위변수인 자율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구축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적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김순은(2006)의 연구에서는 현대의 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론과 파트너십의 주장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신공공관리론의 부작용과 함께 대두한 신공공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고자 한다.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시공무원, 광역의원, NGO활동가, 구의원, 자치구 공무원의 인식을 토대로 조사되었고, 특징적 변수로서 시민사회론적 요소인 시민사회의 성숙정도, 행정정보공개 수준, 행정의 투명성 정도, 행정의 민주화 수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사용되었고, 시민사회론 및 파트너십론적 요소로서 정책과정에 시민참여의 정도,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정도, 부산광역시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정도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연구 대상간의 인식차이에서는 자치구보다는 광역시가,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고위직 공무원이, NGO 활동가보다는 여타의 연구 대상자가 시민사회론과 파트너십론적 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방정부 레벨 차이에서는 각 변수에 대하여 시공무원들이 자치구 공무원들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NGO활동가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각 집단간의 인식차이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지방의원이나 NGO활동가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희봉(2006)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참여가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유형을 투표 참여, 정치행위, 인터넷 정부정책 참여, 언론매체 이용, 단체참여 및 활동, 공공목적 단합 활동 등 6개로 구성하여, 이것이 로컬 거버넌스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지역문제 참여, 지역문제 자원봉사, 지방자치단체 활동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지역내 갈등·문제의 자체적 해결, 지역사회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표현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목적을 위한 단합활동에 참여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로컬 거버넌스 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정부정책 참여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로컬 거버넌스 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언론매체 이용에서는 신문, 라디오, TV 등 기성언론 매체들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인터넷 신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환철·김세훈(2007)의 연구에서는 로컬거버넌스의 개념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의 공공·민간·제3부문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및 “여러 기관의 공동활동(multi-agency working)”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기지 활용이라는 지역 현안을 사례로 로컬거버넌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 논의를 통한 구성변수로는 참여, 전문성, 자율성, 집단간 신뢰, 정보공유, 자원의 동원능력, 지역적 영향력 등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특히, 참여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시민단체의 참여로 측정하였고, 집단간 신뢰는 시청과 시민단체간의 상호신뢰와 의사교환정도, 우호적 관계 형성 정도로 측정하였다. 의정부 시민과 시공무원,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거버넌스 형성의 핵심변수로 보고 있는 시민참여와 참여보장,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상호신뢰관계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참여관계(시민참여보장·시민단체참여보장·공개·상호신뢰·우호동반자관계), 내적요인(자체 활용방안·자율적 찬반의사·자체분석능력), 외적요인(자체 여론형성능력·지역 정치 압력행사)으로 분류된 바, 정책수립과정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이들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내

적능력, 외적능력이 유의수준 0.05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관계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구성변수를 표로 나타내면 <표 2-4>와 같다.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정부와 시민단체(NGO)간의 관계에 관한 측면에서 구성된 측정 지표로써 결혼이민자와 지원기관 및 시민단체에 관한 관계에 대한 본 연구에서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지원기관 및 시민단체의 협력의 측면에서 조정한 변수를 구성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2-4>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의 구성변수

연구자	측정치표				
박희봉 · 김명환 (2000)	사회자본 : 의사소통 채널, 정부의 역할, 지역사회 규범, 신뢰				
이병수 · 김일태 (2001)	상호성(reciprocity), 신뢰(trust), 네트워크(network) 협력과 조정(partnership & adjustment)				
김형양 (2004)	정책과정의 참여, 정부의 참여보장과 정보의 공개, 신뢰와 대화, 네트워크(파트너십), 정부의 NGO에 대한 인정, NGO의 자율성, NGO의 외부역량, NGO의 내부역량, NGO의 주민대표성, 정부의 지원				
	의제설정과정	정책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
최병대 · 김상구 (2004)	공익문제에 이의제기, 여론형성과 주도, 정치인·관료에 공의제 제시	시민이해표출·집약, 합리적 대안제시, 이해집단간 갈등조정	전문지식과 자문제공, 토론회·청문회 참여자, 정책결정집단에 압력행사	집행과정에서 정책수정 및 보완요구, 정책 축소 및 폐지 요구	정부의 책무성, 정책오류의 수정·변경 시도, 시민단체의 견제 정책투입시도
김명숙 (2005)	거버넌스 차원 I : 규모 (최저의사결정단위)	거버넌스 차원 II : 민주성	거버넌스 차원 III : 책임성	거버넌스 차원 IV : 합리성	

복문수 (2005)	시민적	조직 내부요인: 도덕성,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
	정당성	조직 외부요인: 사회 미성숙성, 시민참여성, 재정자립성, 목적성
김 인 (2006)	참여의 자율성 (자발적 참여, 자주적 의사표현), 협력과 조정 (지속적 대화, 설득, 상호신뢰성), 네트워크 (위원회 참여정도, 상호연계망 구축)	
김순은 (2006)	시민사회의 성숙정도, 행정정보공개의 수준, 행정의 투명성 정도, 행정의 민주화 수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정책과정에 시민참여의 정도,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정도, 부산광역시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정도	
박희봉 (2006)	투표참여, 정치행위, 인터넷 정부정책 참여, 언론매체 이용, 단체참여 및 활동, 공공목적 단합 활동	
김환철 · 김세훈 (2007)	참여, 전문성, 자율성, 집단간 신뢰, 정보공유, 자원의 동원능력, 지역적 영향력,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만족도(종속변수)	

1) 접근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접근성을 첫 번째 변수로 활용한다. 접근성은 기존의 거버넌스 연구에서 참여자를 거의 정부와 시민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이를 결혼이민자와 지원기관 및 시민단체간의 관계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접근성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본 조사에서 이를 채택한 이유는 결혼이민자라는 특수한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낯선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접근성은 기존의 거주민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결혼이민자들이 느끼고 있는 인식의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참여도나 만족도 등의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문화지원 기관 및 단체의 홍보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대표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지원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표성을 두 번째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김형양(2004)의 연구에서는 NGO의 주민대표성의 문제가 하나의 변수로 포함되어 있다. 거버넌스를 정부-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표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주장한다는 것을 전제한 시각이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사회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아왔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과연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가는 거버넌스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가 결혼이민자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하고, 이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의 문제인 대표성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유사한 의미에서 복문수(2005)의 시민적 정당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현재적·잠재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 역시 결혼이민자의 현재적·잠재적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올바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병대·김상구(2004)의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로써 여론형성, 시민의 이해표출·집약, 시민단체 의견 정책투입시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민단체가 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때 유효한 역할로 볼 수 있다.

3) 상호의존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지원 시민단체의 실무자와 결혼이민자의 상호의존성을 세 번째 변수로 활용한다. 상호의존성은 거버넌스 개념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의사소통, 대화, 신뢰, 호혜, 협력, 네트워크 등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박희봉·김명환(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측정지표로써 의사소통 채널과 신뢰가 사용되고 있다. 이병수·김일태(2001)의 연구에서는 거

버너스에서 각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이 하나의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상호의존성을 두 가지의 차원에서 보았는데, 그 하나는 상호성(reciprocity) 혹은 호혜성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trust)의 문제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김형양(2004)의 연구에서도 신뢰와 대화라는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각 참여자 간의 협력 측면에서 상호의존성이 거버넌스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인(2006)의 연구에서도 협력과 조정의 측정지표로써 지속적 대화, 설득, 상호신뢰성이 사용되고 있으며, 김환철·김세훈(2007)의 연구에서도 집단간 신뢰 변수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성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도 핵심변수으로써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낼 것을 추론할 수 있다.

4)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합도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선호도와 체감도의 부합정도를 네 번째 변수로 활용한다. 이 변수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것으로, 고숙희(2008:35-45)는 결혼이민자들이 동화주의 및 다원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표본의 대다수인 78%가 동화주의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다원화를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동화주의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지원기관 및 시민단체의 실무자들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동화주의를 선호하는지, 다문화주의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성격이 동화주의에 가까운지 다문화주의에 가까운지를 조사한 후, 이 두 가지 설문이 부합하는지 즉, 응답의 흐름이 유사한 방향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원숙연·박진경(2009: 872-876)의 연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에 대한 정향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동화→차별·배제→다문화의 순서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차별·배제에 대한 정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다문화정책의 사전적 의미와 실체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실무자와 결혼이민자의 선호도와 체감도를 파악하는 것은 현 단계의 다문화적 실태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5) 만족도

다문화가족지원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만족도를 다섯 번째 변수로 활용한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¹¹⁾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지원기관 및 시민단체를 찾는 이유는 크게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한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교육수강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이 지원기관을 찾은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가장 요구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김순은(2006)의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론적 요소의 특징적 변수로써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꼽고 있는데,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른 인식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들과 결혼이민자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라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변수로써 다문화정책의 방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6)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특징적 변수로써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수준을 여섯 번째로 활용한다. 이때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은 시간적으로 2010년 하반기 현 단계의 수준을 의미하며, 정책과정상으로는 정책집행시의 거버넌스 수준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실무자와 결혼이민자가 협력적

11)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결혼 8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피살당한 故 닥터황옥(20)씨의 사건은 국제결혼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반한 감정마저 일고 있다(프라임경제, 2010.07.14).

인 관계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로 정의한다. 유사한 의미로 이병수·김일태(2001)의 연구에서는 협력과 조정(partnership & adjustment)이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으로 사용되었고, 김순은(2006)의 연구에서도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정도가 특징적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한승준(2008:67-87)은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다문화 거버넌스의 이행단계를 진입단계, 전환단계, 정착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에 따른 다문화 사회 현상과 정책대응, 그리고 거버넌스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 단계를 차용한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발전과정을 진입단계, 전환단계, 정착단계로 제시했을 때, 조사대상자들은 부산광역시의 다문화단계를 어느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2. 설문지의 구성

설문문항은 각 변수별로 2~3개의 측정지표(문항)로 구성하는데, 이는 척도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측정지표의 유형은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명목척도와 프로그램에의 참여횟수를 알아보기 위한 주관적 응답방식을 제외하고는 등간척도를 가정하는 리커트 5점 척도(Likert-type 5-point)로 구성한다. 즉, 문항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낮다'에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낮다'에 2점, '보통이다' 혹은 '중간'에 3점, '약간 그렇다' 혹은 '높다'에 4점, '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높다'에 5점을 부여한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실무자용과 결혼이민자용으로 구분하였고, 결혼이민자용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거주지역, 출신국가, 한국국적 취득여부, 한국거주기간, 연령, 학력, 자녀유무별로 구성하였고, 실무자의 경우 근무지역, 근무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의 성격(정부지원여부), 근속연수, 연령, 학력, 직급, 성별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접근성 6문항, 대표성 4문항, 상호의존성 3문항, 만족도 3문항, 부합도 5문항, 거버넌스

수준 문항 2문항, 개인적 특성 변수 7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에 관한 특징적 변수와 각 측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2-5>와 같다.

<표 2-5> 변수의 선정과 측정지표 및 측정방식

특징적 변수		측정지표	문항	척도
접근성		가장 먼저 접한 기관(단체)	1-1	명목 척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이유	1-2	
		기관(단체)을 접하게 된 경로	1-3	
		결혼이민자가 기관(단체)을 찾은 목적	1-4	5점 척도
		기관(단체)에 대한 접근용이성	1-5	
		다문화프로그램 신청절차의 용이성	1-6	
대표성		결혼이민자의 프로그램 참여 수준	2-1	주관식
		프로그램에의 참여 횟수	2-2	
		기관(단체)의 결혼이민자 이해대변정도	2-3	5점 등간 척도 (Likert -type scale)
		결혼이민자의 의견반영정도	2-4	
상호의존성		실무자와 결혼이민자간 신뢰도	3-1	5점 등간 척도 (Likert -type scale)
		의사소통의 수준	3-2	
		프로그램의 상호 방향성	3-3	
만족도		방문목적에 대한 만족도	4-1	5점 등간 척도 (Likert -type scale)
		방문이후 한국생활 개선도	4-2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참여의향	4-3	
부 합 도	동화 주의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도	5-1	5점 등간 척도 (Likert -type scale)
		정책의 동화주의에 대한 체감도	5-3	
	다문화 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	5-2	
		정책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체감도	5-4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		다문화 거버넌스 수준	6-1	5점 등간 척도 (Likert -type scale)
		다문화 거버넌스의 단계	6-2	

1) 접근성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응답범주를 명목척도로 구성한 방식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로 구성한 방식이 그것이다. 먼저 첫 번째 방식에는 결혼이민자들이 적응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 정보를 얻게 된 경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를 찾

은 가장 큰 목적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시·공간적 혹은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그 이유와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앞으로 접근성이 낮은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방식과 홍보방법을 변화시켜, 정책집행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방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를 찾는 가장 큰 목적을 탐색함으로써 다문화지원서비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 측정을 위한 두 번째 방식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방문의 용이성과 지원프로그램의 신청절차의 용이성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 접근할 경우, 결혼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장애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방문의 용이성과 신청 절차의 용이성을 물어봄으로써 현 단계의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접근성을 알아볼 수 있다.

2) 대표성

대표성은 세 가지의 측정지표로 측정한다. 첫째,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도 둘째,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가 결혼이민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준 셋째,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집행시에 결혼이민자의 의견반영 정도 등을 지표로 활용할 것이다. 이 때,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횟수에 관한 주관식 응답도 포함하였다. 이는 참여도와 이해대변도 및 의견반영도가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것이다.

3)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측정지표로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한다. 첫째는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 둘째는 이들이 인식하는 의사소통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셋째는 지원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지 쌍방향적으로 운영되는지 즉, 기관(단체)주도적으로 운영되는지, 비교적 쌍방향적으로 운영

되는지의 방향성으로 구성하였다. 신뢰와 의사소통수준은 상호의존성의 핵심척도로써 거버넌스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척도는 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지,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현황과 가능성에 관해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측정지표에 포함하였다.

4) 부합도

부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한 뒤, 현재 정책에 대한 각각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질문은 고숙희(2008)의 연구에서 인용하여, 동화주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처럼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로, 다문화주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들이 태어난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즐기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체감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평균점을 적용한 것을 부합도로 사용한다.

5) 만족도

만족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첫째, 방문의 만족도로써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이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또는 프로그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한다. 둘째, 방문이후의 생활개선도로써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 방문한 이후 그 이전보다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지속적 참여의향으로써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세 측정지표는 방문이전과 현재 및 이후의 인식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6)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수준은 두 가지 측정지표로 측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실무자와 결혼이민자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수준을 진입단계, 이행단계, 정착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 단계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은 시간적으로 현 단계와 공간적으로 정책의 집행단계에 국한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현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변수와 그 응답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현 단계의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제 3 장 부산의 다문화 실태와 정책현황

제 1 절 부산의 다문화 실태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규정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따르고 있지만, OECD 국가 기준으로 이민자 비율이 10%를 넘기면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로 간주된다(김선미, 2009:190).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2009년 7월 기준 전체 인구의 2.2%로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민자 증가 추세의 급속성과 압축적 성장(오경석, 2007)이라는 상황 하에서 더 이상 다문화사회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무의미하며 정책이 현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미리 현상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각은 의미가 있다.

다문화사회를 판단하는 세 가지 측면은 첫째, 인구통계학적으로 다문화사회인가, 단일문화사회인가? 둘째, 시민들이 그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인식하는가, 단일문화사회로 인식하는가? 셋째, 도시가 다문화사회로 작동하는가, 단일문화사회로 작동하는가?(윤갑정, 2004:11)이다.¹²⁾ 부산의 등록외국인 현황은 6대 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는 두 번째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인천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을 살펴보면 다문화사회라고 명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주민의 수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한국사회의 인종문제에 관한 연구(장태한, 2001)에서 대구나 광주지역의 대학생들에 비해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개방의 정도가 높았다는 점(지중화 외, 2009:118에서 재인용), 인구통계학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대응한 정책과 일반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는 점 등에서 앞으로 부산이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여지는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어서, 현재의 다문화적 상황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 윤갑정(2004)은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해 논의하면서 호주사회가 다문화사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써 본 질문을 사용하였다.

1. 국제결혼 현황

먼저 현재의 다문화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광역시의 국제결혼 현황을 알아본다. 국제결혼은 작게는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크게는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국제결혼은 <표 3-1>과 같은데, 전체결혼 38,693건 중 1,618건이 국제결혼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 한국남편-외국인처가 1,233명, 한국처-외국인남편이 385명으로 여전히 외국인처의 비율이 외국인 남편에 비해서 3배정도 높은 편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한국남편-외국인처에 대해 살펴보면, 자치구의 규모에 따라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등이 높은 국제결혼 수치를 나타냈지만,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구와 영도구가 각각 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결혼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국의 국제결혼비율인 13.6%에 비해서나, 농어촌지역의 41%(고속희, 2008: 26)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3-1> 부산광역시 국제결혼 현황(2009)

부산광역시	2009									
	남편-혼인건수		남편-외국인처		비율 (%)	처-혼인건수		처-외국인남편		비율 (%)
	수(명)	비(%)	수(명)	비(%)		수(명)	비(%)	수(명)	비(%)	
전체	18,614	100	1,233	100	7	20,079	100	385	100	2
중구	262	1.41	21	1.70	8	276	1.37	17	4.42	6
서구	646	3.47	58	4.70	9	720	3.59	8	2.08	1
동구	555	2.98	61	4.95	11	604	3.01	12	3.12	2
영도구	770	4.14	88	7.14	11	850	4.23	13	3.38	2
부산진	2,214	11.89	128	10.38	6	2,417	12.04	40	10.39	2
동래구	1,386	7.45	64	5.19	5	1,507	7.51	27	7.01	2
남구	1,564	8.40	87	7.06	6	1,604	7.99	34	8.83	2
북구	1,520	8.17	91	7.38	6	1,708	8.51	23	5.79	1
해운대	2,041	10.96	125	10.14	6	2,179	10.85	62	16.10	3
사하구	2,077	11.16	126	10.22	6	2,232	11.12	37	9.61	2
금정구	1,111	5.97	77	6.24	7	1,269	6.32	24	6.23	2

강서구	364	1.96	31	2.51	9	295	1.47	-	-	-
연제구	1,159	6.23	77	6.24	7	1,400	6.97	26	6.75	2
수영구	854	4.59	54	4.38	6	991	4.94	35	9.09	4
사상구	1,484	7.97	105	8.52	7	1,481	7.38	15	3.90	1
기장군	607	3.26	40	3.24	7	546	2.72	9	2.34	2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 결혼 이민자 현황

부산광역시의 결혼이민자 현황은 <표 3-2>와 같이 2010년 기준 5,45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6년의 3,99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남편은 493명으로 4,964명인 외국인아내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치구별로 주요연구대상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진구에 556명, 사하구에 554명이 거주하고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상구, 해운대구, 북구에 각각 400명 이상이 거주함으로써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와 금정구에도 각각 3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낸다. 영도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서구에는 각각 2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에 1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부산의 모든 자치구에는 100명 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나 사하구는 비교적 낮은 거주율을 보이고 있는 강서구나 기장군에 비해 공업화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적취득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는데, 그 이유로는 귀화시기의 미도래, 취득절차에 대한 무지, 남편의 비협조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현황(2010)

구분	국제결혼이주자(명)			혼인귀화자(명)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456	493	4,963	2,419	74	2,345
중구	123	10	113	50	1	49
서구	223	11	212	117	0	117
동구	198	7	191	98	3	95
영도구	302	17	285	162	3	159
부산진구	608	52	556	259	4	255
동래구	303	33	270	121	6	115
남구	421	49	372	177	5	172
북구	458	30	428	240	6	234
해운대구	522	82	440	220	14	206
사하구	613	59	554	328	7	321
금정구	338	35	303	114	0	114
강서구	141	8	133	54	1	53
연제구	267	25	242	82	10	72
수영구	276	37	239	99	3	96
사상구	522	30	492	255	8	247
기장군	141	8	133	43	3	40

출처: 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3.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부산의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007년에 2,269명, 2008년에 3,0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표 3-3>을 보면, 2007년에는 부산진구에 12.25%, 북구에 11.19%, 해운대구에 11.72%, 사하구에 10.58% 등 비교적 높은 수치의 다문화 가정 자녀수가 몇몇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특히 2008년에는 해운대구와 사상구에 각각 22.96%와 14.16%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 시기 이들 자치구에 특별한 정책적 요인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이동하는 보편적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3-3>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07~2008)

구분	2007		2008	
	자녀수(명)	구성비(%)	자녀수(명)	구성비(%)
계	2,269	100	3,057	100
중구	20	0.9	34	1.1
서구	88	3.9	112	3.7
동구	174	7.7	150	4.9
영도구	169	7.5	255	8.3
부산진구	278	12.3	224	7.3
동래구	185	8.2	119	3.9
남구	197	8.7	106	3.5
북구	254	11.2	305	10
해운대구	266	11.7	702	23
사하구	240	10.6	290	9.5
금정구	29	1.3	85	2.8
강서구	41	1.8	42	1.4
연제구	63	2.8	65	2.1
수영구	108	4.8	123	4
사상구	138	6.1	433	14.2
기장군	19	0.8	12	0.4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재구성

구체적으로 <표 3-4>를 보면,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4,808명으로 <표 3-3>의 전체 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1년에 천 명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에 10% 이상이 거주하고, 북구와 해운대구에 10%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혼 이민자 현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4>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정자녀 현황(2010)

구분	다문화가정자녀(명)			비율(%)
	계	남	여	
계	4,808	2,421	2,387	100
중구	64	23	41	1.3
서구	196	97	98	4.1
동구	139	73	66	2.9
영도구	279	132	147	5.8

부산진구	555	275	280	11.5
동래구	257	127	130	5.3
남구	385	188	197	8
북구	472	257	215	9.8
해운대구	463	242	221	9.6
사하구	620	316	304	12.9
금정구	261	134	127	5.4
강서구	122	58	64	2.5
연제구	185	88	97	3.8
수영구	201	105	96	4.2
사상구	507	256	251	10.5
기장군	103	50	53	2.1

출처: 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제 2 절 부산광역시의 다문화 정책현황과 문제점

1. 다문화 관련 정책 현황

1) 법적근거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법률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결혼이민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의 3 정의,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모자보건법(제3조의 3), 국적법(제6조) 등의 적용을 받고 동시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문화정책의 법적 근거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그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알아본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2010.3.19)¹³⁾

① 목적(제1조)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2)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시행 2009.8.5)

① 목적(제1조)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시책(제3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

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3. 가적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③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4조)

부산광역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 설치 등(제5조)

부산광역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회를 둔다.

2) 조직 및 인력

부산광역시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소관부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지만, 정책적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주로 외국인이면서 여성이므로 관련부서가 다양하고, 그 주무부서를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단체 현황(통계청, 2009)에서 부산광역시 부분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국한되지만, 이 연구의 지향점이 거버넌스 현황의 분석과 그 개선에 있으므로 민간단체도 포함하였다. 부산광역시와 그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 담당인력은 각각 3~4명 정도로 나타났고, 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는 각 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과 같이 기존의 시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된 경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노인복지와 어린이복지 및 장애인복지업무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다문화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다문화지원기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다문화지원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기관 및 단체가 많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가정해보면, 부산진구와 사상구 및 북구, 해운대구는 비교적 다문화지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실태를 서비스의 수요와 연관시켜보면, 사하구에는 매우 큰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5>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단체 현황 (2009)

구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구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1)			서구	총무과(1)	대한적십자사 부산서부지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여성센터
	여성정책담당관실(1)				민원봉사과(1)		
	자치행정담당관실(1)				주민복지과(1)		
중구	총무과(1)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	총무과(1)		금정구이주여성지원센터
	민원봉사과(1)				복지지원과(1)		
	여성가족과(1)				민원봉사과(1)		
동구	총무과(1)	동구종합사회복지관	한백회	강서구	총무과(1)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길상사
	민원봉사과(1)				민원봉사과(1)		
	주민복지과(1)				주민생활지원과(1)		
영도구	경제진흥과(2)		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	연제구	총무과(1)	부산국제교류재단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과(1)				주민생활지원과(1)		
	교육문화과(1)				복지사업과(1)		
부산진구	총무과(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	부산진문화원	수영구	평생학습과(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홀터수영종합사회복지	
	복지사업과(1)				민원여권과(1)		
	민원여권과(1)				복지서비스과(2)		

		회복지관 부산진구 다 문화가족지 원센터				관	
동 래 구	총무과(2)	동래종합사 회복지관 사직종합사 회복지관	부산이주여 성 인권센터	사 상 구	총무과(1)	모라종합사 회복지관 백양종합사 회복지관 사상구 다문 화가족지원 센터	삼산거주의 국인지원협 회
	종합민원과 (1)				민원여권과 (1)		
	복지과(1)				복지서비스과 (1)		
남 구	총무과(1)	아시아공 동체학교			행정지원과 (1)	부산여성가 족개발원다 문화가족센 터 장선종합사 회복지관 화정종합사 회복지관 화명종합사 회복지관 만덕종합사 회복지관 덕천종합사 회복지관 남산정사회 복지관	
	민원여권과 (1)	남구종합사 회복지관			민원봉사과 (1)		
	주민복지과 (1)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 터			주민복지과 (1)		
해 운 대 구	경제진흥과 (1)	해운대구 다 문화가족지 원센터 영진종합사 회복지관	부산여성회 해운대지부	북 구	주민복지과 (1)	자원봉사코디 팀(1)	
	민원여권과 (1)				주민복지과 (1)		
	주민평생학습 지원과(1)						
사 하 구	총무과(1)	사하구 다문 화가족지원 센터		기 장 군	총무과(1)	기장군 다문 화가족지원 센터	
	민원여권과 (1)				사회복지과 (2)		
	주민서비스과 (1)				민원봉사과 (1)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재구성

3) 예산

부산광역시의 2010년도 다문화정책을 맡고 있는 조직별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 40,408,042천 원,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여성회관에 2,249,281천 원, 여성문화회관에 2,128,878천 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들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56%, 0.03%, 0.03%로 크지는 않으나, 전년도 기준 증감률은 각각 67.63%, 20.74%, 2.89%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¹⁴⁾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6>의 2010년도 여성정책담당관 소관의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2010년도 기준 1,317,560천 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 640,674천 원에 비해 676,886천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63,360천 원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용이 327,000천 원이며,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에 640,740천 원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52,800천 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비로 42,820천 원이 책정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는 204,200천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101,348천 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6>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별 예산 (2010)

(단위: 천 원)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다문화가족 지원 ¹⁵⁾	1,317,560	640,674	676,88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자치단체등이전)	1,063,360	514,326	549,0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327,000		
다문화가족지원방문교육	640,74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52,80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42,82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4,200	101,348	102,852
일반운영비	60,200	57,800	11,400
사무관리비	61,200	39,800	21,400
다문화가족지원간담회, 워크숍, 교육비	9,000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위원수당	2,800		

14)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15)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45,000 천원, 이주노동자 상담지원사업 5,000 천원이 포함된 금액.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400		
다문화가족 모국서적 구입 지원	20,000		
다문화가족지원 홍보물 인쇄비 등	8,000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재 제작	20,000		
2010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8,000		
업무추진비	1,000		
일반보상금	99,000	11,000	88,000
다문화가정자녀와 대학생 멘토링사업	4,000		
다문화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	5,000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40,000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사업	50,000		
민간이전	35,000	28,000	7,000

출처: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4) 사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은 일곱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첫째는,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둘째는,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프로그램 셋째는, 가족프로그램 넷째는,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다섯째는, 취·창업프로그램 여섯째는, 방문교육사업 일곱째는, 통·번역서비스 프로그램 등이다. 각 센터마다 이러한 범주의 프로그램 들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그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상호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멘토 결연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한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가족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이

민자 및 배우자의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방문교육 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통·번역 서비스는 기정착한 이민자가 같은 출신국 초기 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¹⁶⁾ 이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의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교육과 한식요리교육, 전통 문화체험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프로그램에는 법률과 인권 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세계문화체험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가족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 남편교육, 다문화가족 육아정보나눔터와 다문화 가족사랑 한마당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멘토 양성 및 보수교육, 멘토멘티 결연식, 찾아가는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취·창업 지원사업에는 취·창업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에 대한 기초소양교육, 직업교육 등이 연중 혹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교육서비스지원에는 한글교육 서비스와 아동양육 서비스가 주2회 이루어지고 있다. 통·번역 서비스는 베트남어가 제공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 혹은 외부에 파견될 수 있다.¹⁷⁾

한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가족복지사업 중에서도 가족기능보완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형성지원사업과 결혼이민여성 한국어학교 등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형성지원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나타나기 쉬운 언어지체현상과 심리정서적인 불안정, 사회성 결여의 문제를 언어발달교육과 정서·사회성 향상 서비스를 통해 예방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육아정보를 제공을 통해 건강한 자녀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국어 임

1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www.bwf.re.kr

17)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http://wcc.busan.go.kr>

신·출산·육아 도서대여, 임신기간 중 병원통역동행, 출산준비교육, 언어발달 교육, 정서·사회성 향상, 보건소 및 소아과병원통역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학교는 한국어와 자녀양육,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기초문법, 생활회화, TOPIK초/중급과정, 자녀와의 ‘언어’공감대 형성수업, 귀화필기 및 사회적응시험준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⁸⁾

2.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2장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실질적으로 동화주의 혹은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성격을 띠면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불일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역시 다문화정책들이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통해 사회통합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의 인정보다는 한국사회로의 통합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는 한국어교육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 한국요리 교실, 다도체험 등 한국의 문화들을 결혼이민자들에게 주입하는 형식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다문화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회통합정책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기 혹은 이행기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점차 이문화의 인정과 공존의 방향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부산의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필리핀,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등 다양하지만, 이들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다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의사소통문제라는 점에 비추어(박대식·최경은, 2008:52) 통·번역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시행되고 있다하더라도 일부 언어에 국한되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언어 통·번역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8)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www.yjingu.or.kr

또, 부산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공공기관인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혹은 사단법인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등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적인 시민단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민·관의 협력 체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양자가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예이기는 하지만,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¹⁹⁾의 경우 교육지원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 여가지원프로그램, 365위기상담센터, 기타활동프로그램의 범주로 상대적으로 다양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집행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의 대상자가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에 국한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국사회로의 흡수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대상자는 다문화가족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한국 남편이 아내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그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이해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출신의 남녀평등 문화에 익숙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간섭하는 시댁과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김수연 외, 2009:45-47),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결혼이민자들이 진정한 다문화의 인정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데, 이는 종국적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19)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http://www.samsan2121.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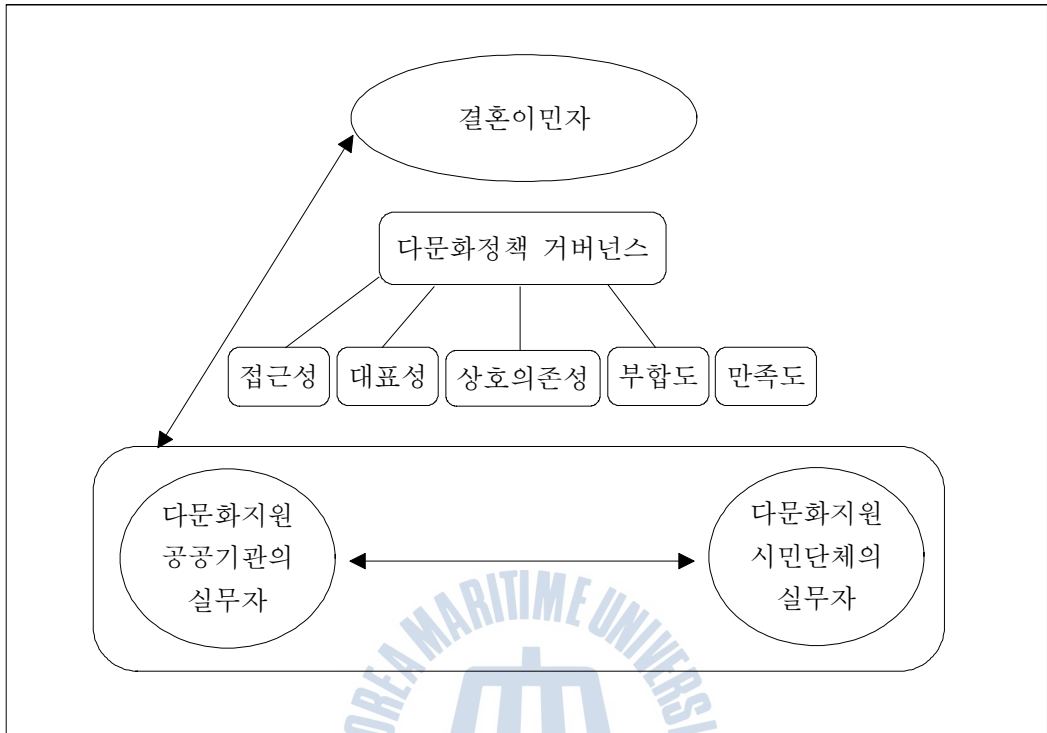
제 4 장 부산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제 1 절 연구모형과 검증내용

1. 연구모형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는 정책의 대상집단이자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주체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지원조직인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세 영역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간의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적 변수는 여섯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지원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접근성인데, 이는 접근의 용이성과 절차의 용이성으로 측정된다. 두 번째로 다문화지원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표성인데, 이는 이러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와 대외적으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대변도 그리고 대내적으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견반영도로 측정한다. 세 번째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 의사소통, 쌍방향 강의방식의 세 가지 척도로 측정한다. 네 번째 변수로써 정책에 대한 부합도는 결혼이민자의 동화주의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로 측정한다. 다섯 번째 변수는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써 방문의 만족도와 생활개선도, 지속적 참여의향으로 측정한다. 여섯 번째 변수는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으로 임의적으로 정의한 거버넌스 수준과 거버넌스 단계로 측정한다. 앞의 다섯 가지 변수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적 구성요소로써 서로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 각 변수에 대해 참여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변수에도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각 변수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현 단계의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2. 검증내용

본 연구의 검증내용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사대상인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참여집단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참여자 중 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 특징적 변수에 따른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섯 가지의 특징적 변수에 대한 개인적 특성별 인식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현 단계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 집단별 인식차이

본 분석대상의 참여자를 집단으로 구분하면, 결혼이민자집단과 실무자집단이 존재한다. 각 특징적 변수에 대해 이들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병대·김상구(2004)의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과정에서 수행역할 책임이 있는 집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수행책임이 없는 집단은 상대방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각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응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한 변수들에 대해 집단별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거버넌스 체계가 미성숙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정책 분야에서는 실무자와 결혼이민자의 관계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실질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인식차이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검증내용 I. 결혼이민자와 실무자 사이에는 접근성, 대표성, 상호의존성, 부합도, 만족도,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별 인식차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개인적 특성변수에 대한 문항을 거주지역, 출신국가, 한국국적 취득여부, 한국거주기간, 연령, 학력, 자녀유무의 7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배경의 결혼이민자들은 각 변수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숙희(2004)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학력에 따라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박대식·최경은(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의 특성(사회주의)에 따라 한국사회에의 적응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조사대상자 중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별로 각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검증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특성별로 각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문항에 대해 이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증내용Ⅱ.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접근성, 대표성, 상호의존성, 부합도, 만족도,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현황분석

본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등의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가운데 협조된 11개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의 형식이 고르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방문조사가 주를 이루었다. 조사 기간은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다. 이들 기관에 방문하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글 이해 수준을 가늠하지 못해 조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하였다. 결혼이민자용은 언어별로 한국어 30부, 영어 30부, 일본어 30부, 중국어 50부, 베트남어 60부 등 총 200부가 배포되었고, 실무자용은 50부가 배포되었다. 이 중 결혼이민자용은 105부가 회수되었는데, 결측치가 많아 분석에 부적합한 1부를 제외하였고, 실무자용은 25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50%에 근접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1. 표본의 특성과 신뢰도 분석

1) 표본의 집단구성

표본의 집단구성은 결혼이민자가 104명으로 80.6%를 차지하고 있고, 실무자는 25명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다. 양 집단의 표본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각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다문화담당 실무자가 1명에서 3명 내외였으므로 이의 표본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틀을 결혼이민자와 실무자의 양자관계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조사된 실무자의 근무기관 및 단체가 정부재원을 받는 조직과 받지 않는 조직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삼자관계로 보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집단구성

집단 구분	빈도수(명)	유효퍼센트(%)
결혼이민자	104	80.6
실무자	25	19.4
합계	129	100.0

2) 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수영구, 부산진구, 사하구, 해운대구의 순서로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10명 이하의 수준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영도구 등 표본이 없는 자치구는 관련 기관의 업무과도로 인한 협조의 미흡 등 현실적인 문제가 따랐기 때문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44.1%인 4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국적은 88.4%인 84명이 미취득인 상태에 있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15.5%인 15명,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은 45.4%인 44명, 3년 이상 5년 미만은 24.7%인 24명, 5년 이상은 14.5%인 14명이 응답했다. 연령은 예상대로 20대가 54.7%인 52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30대가 33.7%로 32명, 40대가 11.6%로 11명이었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27명으로 28.1%를 차지했고, 고졸이 37.5%로 36명, 대졸도 34.4%인 33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녀는 48.4%인 46명이 있다고 응답했고, 51.6%인 49명이 없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2>와 같다.

<표 4-2> 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변수	응답범주	빈도(명)	유효퍼센트(%)
거주지역	남구	8	8.2
	동구	4	4.1
	동래구	1	1.0
	부산진구	17	17.5
	북구	2	2.1
	사상구	8	8.2
	사하구	13	13.4
	수영구	19	19.6
	서구	6	6.2
	연제구	2	2.1
	중구	2	2.1
	해운대구	12	12.4
	기타	3	3.1
	합계	97	100
출신국가	중국(한족)	19	18.6
	중국(조선족)	5	4.9
	베트남	45	44.1
	필리핀	12	11.8
	일본	13	12.7
	러시아	3	2.9
	기타	5	5.0
	합계	102	100
한국국적 취득여부	취득	11	11.6
	미취득	84	88.4
	합계	95	100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	15	15.5
	1년~3년	44	45.4
	3년~5년	24	24.7
	5년이상	14	14.5
	합계	97	100
연령	20대	52	54.7
	30대	32	33.7
	40대	11	11.6
	합계	95	100
학력	초 졸	3	3.1
	중 졸	24	25.0
	고 졸	36	37.5
	대 졸	33	34.4
	합계	96	100

자녀유무	있음		46	48.4
	자녀수	1명	34	72.3
		2명	12	25.5
	없음		49	51.6
	합계		95	100

3) 실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결과 실무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담당직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 기관들은 거의 50% 이상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이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근속년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54.2%인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52.2%인 1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학력은 60%인 15명이 대졸이라고 응답하였다. 직급은 정규직 과장급 이하가 75%인 1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라고 응답한 경우 여기에 포함하였고, 자원봉사자에 5명이 응답하였다. 성별 조사결과 자원봉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실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변수	응답범주	빈도(명)	유효 퍼센트(%)
근무지역	강서구	1	4.0
	금정구	3	12.0
	남구	5	20.0
	동구	1	4.0
	동래구	2	8.0
	부산진구	4	16.0
	사하구	1	4.0
	수영구	1	4.0
	서구	5	20.0
	해운대구	2	8.0
	합계	25	100

근무기관(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32.0
	종합사회복지관	5	20.0
	부산여성회	5	20.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3	12.0
	시민사회단체	3	12.0
	기타	1	4.0
	합계	25	100
기관성격 (운영방식)	100% 정부지원	14	56.0
	50%이상 정부지원	7	28.0
	50%미만 정부지원	3	12.0
	독립적 운영	1	4.0
	합계	25	100
근속년수	1년미만	7	29.2
	1년~3년	13	54.2
	3년이상	4	16.6
	합계	24	100
연령	20대	13	52.0
	30대	6	24.0
	40대 이상	6	24.0
	합계	25	100
학력	중졸 이하	3	12.0
	고졸	1	4.0
	전문대졸	3	12.0
	대졸	15	60.0
	대학원 이상	3	12.0
	합계	25	100
직급	자원봉사자	5	20.8
	정규직 과장급 이하	18	75.0
	국장급 이하	1	4.2
	합계	24	100

4)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접근성, 대표성, 상호 의존성, 부합도, 거버넌스 수준의 여섯 가지의 특징적 변수를 선정한 바, 이들을 측정하는 측정지표간의 내적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신뢰도 분석은 명목척도와 주관식 문항을 제외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통상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s

Alpha 값이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²⁰⁾, <표 4-4>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측정지표의 Alpha 계수가 0.7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측정지표의 신뢰도 검증

변수		측정지표	문항	Alpha
접근성		기관(단체)에 대한 접근용이성	1-5	0.748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신청절차의 용이성	1-6	
대표성		기관(단체)의 결혼이민자 이해 대변 정도	2-3	0.638
		결혼이민자의 의견 반영 정도	2-4	
상호의존성		기관(단체)과 결혼이민자 간의 신뢰 정도	3-1	0.749
		의사소통의 수준	3-2	
		프로그램의 상호 방향성	3-3	
만족도		방문목적에 대한 만족도	4-1	0.759
		기관(단체)에 방문이후 한국생활 개선 정도	4-2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참여 의향	4-3	
부합도	동화주의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도	5-1	0.814
		현재 정책의 동화주의에 대한 체감도	5-3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	5-2	
		현재 정책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체감도	5-4	
거버넌스 수준		다문화 거버넌스의 수준	6-1	0.756
		다문화 거버넌스의 이행단계	6-2	

그러나 대표성의 세 측정지표인 참여도, 이해대변도, 의견반영도의 신뢰도 분석에서 Alpha 계수가 0.561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이해대변도에 비해서 다른 척도, 특히 참여도의 평균을 현저히 낮게 응답함으로써 응답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 참여도는 시민단체의 일반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지표이고, 이것을 토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단체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양자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시민운동이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일반시민의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표

20) Cronbach's Alpha 계수는 내적 일관성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사회과학에서 흔히 0.8~0.9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며 0.6이하이면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학식·김영, 2001: 107; 우양호, 2004: 133에서 재인용).

성이 높아지지만, 결혼이민자와 같은 특수한 집단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수혜자의 참여도가 저조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장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대표성 변수에서는 참여도를 제외한 이해대변도와 의견 반영도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두 측정지표만을 사용했을 때, 대표성의 Alpha 계수는 0.638로써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지원 서비스의 실태 분석

다문화지원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진입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범주를 명목척도로 구성한 접근성 문항을 빈도분석한다. 다음으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각 특징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진입 경로

(1) 1차적 접근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표 4-5>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5.8%인 72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응답했고, 그 뒤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9.3%인 12명이 응답했다. 이 두 기관은 주요 기능상 그 성격을 달리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는 목적으로 찾아오는 반면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불화의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이 주를 이루며

먼저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응답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편중된 것은 설문조사 대상의 편의적 추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조사의 통계적 의미에 대한 한계가 일정부분 존재한다.

또한 기타 의견에 16.3%인 21명이 응답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및 구청 등을 주관식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다수라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1차적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빈도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유효 퍼센트(%)
1-1.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2	55.8
	종합사회복지관	5	3.9
	부산여성회	6	4.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2	9.3
	시민사회단체	3	2.3
	결혼이민자가족모임	5	3.9
	이웃	5	3.9
	기타	21	16.3
	합계	129	100

(2) 1차적 대상에 대한 접근 이유

1-1의 문항에서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1-2의 문항에는, 심리적 친밀감 때문이라는 이유에 28.9%인 37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기관의 문제 해결능력에 22.7%인 29명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기관의 개방성에 각각 14.1%인 18명이 응답함으로써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접근성에서 거리나 개방성 등의 물리적 요건보다는 심리적인 친밀감이나 자신의 필요에 대한 충족 등 정서적 요건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지원 기관 및 단체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기관 및 단체가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요건을 충족하는 질적인 성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6>과 같다.

<표 4-6> 1차적 접근 이유 빈도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유효 퍼센트(%)
1-2. (1-1문항 답변)이유	지리적 인접성	18	14.1
	심리적 친밀감	37	28.9
	개방성	18	14.1
	문제해결 능력	29	22.7
	프로그램의 체계성	12	9.4
	기타	14	10.9
	합계	128	100

(3) 지원기관(단체)에 대한 접근 경로

앞에서 응답한 기관에 대한 접근 경로는 <표 4-7>과 같다. 즉, 지인의 소개에 60.5%인 75명이 압도적으로 응답함으로써 TV·신문·인터넷·관보·공보 등의 대중매체에 의한 경로는 의외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착 초기에 이러한 다문화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접근 경로에 지인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인이 거의 없는 정착 초기의 결혼이민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체에 의한 홍보나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7> 접근 경로 빈도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유효 퍼센트(%)
1-3. 접근 경로	TV·신문광고 및 홍보	15	12.1
	인터넷	12	9.7
	관보·공보	4	3.2
	지인소개	75	60.5
	기타	18	14.5
	합계	124	100

(4) 기관(단체)를 방문한 가장 큰 목적

결혼이민자들이 지원기관을 찾은 목적은 <표 4-8>에 나타나듯이, 한국어 강좌의 수강과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 한국 문화 습득이 거의 대다수인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어문제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언어를 빨리 습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것이 2세에까지 대물림되어 이들의 학습부진 등 2차적 문제를 수반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친구 만들거나 부부문제, 육아문제의 해결은 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상의 문제와 함께 부부·육아 등의 문제는 교육수강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후에 언급할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와도 동일한 맥락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8> 기관 및 단체 방문 목적 빈도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유효 퍼센트(%)
1-4. 기관(단체)을 찾은 목적	한국어 강좌 수강	76	63.3
	친구 만들기	5	4.2
	부부문제 해결	4	3.3
	한국 문화 습득	26	21.7
	육아문제 해결	3	2.5
	기타	6	5.0
	합계	120	100

2)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1) 접근성

<표 4-9>는 접근성에 대한 두 측정지표의 빈도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접근성

에 관한 응답범주를 5점 척도로 설문한 문항에서 먼저 기관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부정적인 의견이 14.4%인 18명, 보통이 32.8%인 41명, 긍정적인 응답이 52.8%인 66명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신청의 절차에 대한 용이성에는 72.4%인 78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접근성은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두 측정지표를 비교하면, 프로그램 신청 절차의 용이성이 기관의 접근에 대한 용이성보다 평균점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신청절차보다는 다문화지원 기관 및 단체에 초기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의 노력보다는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지원기관 및 단체에 초기 접근을 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표 4-9> 접근성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명(%))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1-5. 접근 용이성	10 (8.0)	8 (6.4)	41 (32.8)	34 (27.2)	32 (25.6)	125 (100)	3.56	1.173
1-6. 절차 용이성	4 (3.2)	8 (6.4)	35 (28.2)	34 (27.2)	44 (35.2)	125 (100)	3.85	1.078

(2) 대표성

대표성에 대한 문항은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는 정도와 결혼이민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도,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프로그램 제공에 수용하는 정도로 나타내었는데, 이들 척도는 신뢰도 분석에서 Alpha 계수가 0.561로서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참여도를 제외한 이해대변도, 의견반영도로 분석한다.

<표 4-10>을 보면, 먼저 지원기관 및 단체가 결혼이민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70.5%인 86명이 응답함으로써 다수가 결혼이민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60.7%인 74명으로서 절반 이상이 의견이 반영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척도를 비교해 보면, 의견반영도보다는 이해대변도가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다문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 비해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이 집행되는 일선기관에서 수혜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의 본래적 목적인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데에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0> 대표성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명(%))					합계	평균	표준편차
	낮음		보통		높음			
2-3. 이해 대변도	4 (3.3)	8 (6.6)	24 (19.7)	47 (38.5)	39 (32.0)	122 (100)	3.89	1.034
2-4. 의견 반영도	6 (4.9)	12 (9.8)	30 (24.6)	46 (37.7)	28 (23.0)	122 (100)	3.64	1.091

(3)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에 관한 측정지표로는 결혼이민자와 실무자 간의 신뢰도와 의사소통수준,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방식이 쌍방향으로 운영되는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신뢰도 분석에서 알파계수가 0.749로서 내적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을 보면, 먼저 신뢰도 문항은 긍정적인 대답이 61.8%인 76명이 응답하여 평균 3.72점으로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이 다수였고, 의사소통수준은 긍정적인 응답이 52.9%인 64명으로 평균점이 3.54로 나타나 다른 변수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기관이나 단

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좌가 쌍방적이냐는 질문에 68.1%인 83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강의가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사와 수강생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쌍방적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척도 간의 비교를 보면, 쌍방적 강의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신뢰도가,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의 강의 방식은 쌍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간의 신뢰도는 높은 데에 비해 의사소통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써 이를 높일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상통성(相通性)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조사대상이 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설문지가 대부분 외국어로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보아 한국어가 능숙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부족한 실태에 있는 통·번역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4-11> 상호의존성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명(%))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3-1. 신뢰도	6 (4.9)	10 (8.1)	31 (25.2)	41 (33.3)	35 (28.5)	123 (100)	3.72	1.111
3-2. 의사소 통수준	6 (5.0)	12 (9.9)	39 (32.2)	39 (32.2)	25 (20.7)	121 (100)	3.54	1.080
3-3. 쌍방적 방식	3 (2.5)	8 (6.6)	28 (23.0)	34 (27.9)	49 (40.2)	122 (100)	3.97	1.059

(4) 부합도

부합도는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를 비교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는데, 이들 측정지표에 대한 크론바 알파 계수는 0.814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를 보면, 먼저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평균 4.06으로 매우 높

은 편이고, 체감도 또한 3.84로써 높은 편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3.88로 높은 편이지만, 다문화주의를 체감하는 정도는 3.55로써 선호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응답자들은 다문화주의보다는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를 더 높게 응답하였고, 이에 대한 체감도도 동화주의가 다문화주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의 선호에 일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강한 선호에 비해서 체감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펴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술하도록 한다.

<표 4-12> 부합도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명(%))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5-1. 동화주 의선호	5 (4.1)	4 (3.1)	23 (18.7)	38 (30.9)	53 (43.1)	123 (100)	4.06	1.058
5-3. 동화주 의체감	4 (3.3)	9 (7.4)	31 (25.4)	36 (29.5)	42 (34.4)	122 (100)	3.84	1.083
5-2. 다문화 선호	3 (2.5)	8 (6.7)	25 (20.8)	48 (40.0)	36 (30.0)	120 (100)	3.88	0.997
5-4. 다문화 체감	7 (5.8)	10 (8.3)	43 (35.5)	32 (26.4)	29 (24.0)	121 (100)	3.55	1.118

(5) 만족도

만족도 문항에 대한 측정지표는 방문목적에 대한 문제해결의 만족도, 방문 후의 한국생활에 대한 개선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지속적인 참여 의향 등의 세 가지이다. 이들은 크론바 알파계수가 0.759로서 내적 타당도를 확보했다. <표 4-13>을 보면, 먼저 기관 및 단체 방문에의 만족도는 보통이라

는 응답이 24.2%인 30명이, 긍정적 응답에는 62.1%인 77명이 응답함으로써 평균 3.68점으로써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이 나왔다. 한국 생활의 개선도는 긍정적 응답이 72.9%인 89명이 응답함으로써 이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참여의향에 77.9%인 95명이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척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지속적 참여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문 후 한국 생활의 개선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의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표 4-13> 만족도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명(%))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4-1. 방문 만족도	9 (7.3)	8 (6.5)	30 (24.2)	44 (35.5)	33 (26.6)	124 (100)	3.68	1.151
4-2. 생활 개선도	7 (5.7)	7 (5.7)	19 (15.6)	48 (39.3)	41 (33.6)	122 (100)	3.89	1.111
4-3. 참여 의향	3 (2.5)	5 (4.1)	19 (15.6)	49 (40.2)	46 (37.7)	122 (100)	4.07	0.960

(6)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문항은 두 가지로 측정했는데, 하나는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의 협력적 프로그램운영정도로 정의한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문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승준(2008: 67-87)의 연구에서 거버넌스 이행 단계를 차용한 것으로 진입, 전환, 정착의 단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 4-14>를 보면, 거버넌스 수준에 관한 응답에서는 평균 3.50 점, 거버넌스 이행단계에서는 3.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보통에 웃도는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높게 응답하는 경향에 비추어 보

있을 때, 다른 변수에 비해서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지원기관과 단체에 대해 접근성, 상호의존성, 부합도, 만족도 면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다문화분야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수준은 여전히 그리 높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거버넌스 이행단계를 진입단계, 전환단계, 정착단계로 가정하고, 현재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가 정착단계로 발전하였는가의 질문에 결혼이민자들이 3.43점으로 응답하여, 전환단계를 갓 넘긴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정착단계로 발전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4> 다문화 거버넌스 수준 측정지표 빈도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명(%))					합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6-1. 거버넌스 수준	4 (3.3)	10 (8.3)	47 (38.8)	41 (33.9)	19 (15.7)	121 (100)	3.50	0.967
6-2. 거버넌스 이행단계	6 (5.0)	16 (13.2)	42 (34.7)	34 (28.1)	23 (19.0)	121 (100)	3.43	1.094

3. 거버넌스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특징적 변수로 꼽은 접근성, 대표성, 상호의존성, 부합도, 만족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서 몇몇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앞에서 예측한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각각의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의 집단분류는 첫째, 검증내용 I 을 분석하기 위한 결혼이민자와 실무자로 구분한다. 둘째, 검증내용 II 를 분석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거주 지역별, 출신국가별, 한국 거주기간별, 연령별, 학력별, 자녀유무여부별로 구분한다.

1) 결혼이민자-실무자 간의 t 검증

각 특징적 변수에 대한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표 4-15>와 같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성에 참여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37로써,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대표성 변수의 측정지표인 참여도, 이해대 변도, 의견반영도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15> 결혼이민자-실무자 간 t 검증 결과

변수	집단구분	빈도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접근성	결혼이민자	99	3.717	1.067	0.429	0.668
	실무자	25	3.620	0.740		
대표성	결혼이민자	88	3.716	0.969	0.999	0.320
	실무자	25	3.920	0.624		
상호의존성	결혼이민자	94	3.705	0.936	0.472	0.638
	실무자	25	3.800	0.667		
부합도	결혼이민자	93	3.852	0.888	0.476	0.635
	실무자	25	3.760	0.738		
만족도	결혼이민자	96	3.899	0.948	0.566	0.572
	실무자	25	3.786	0.576		
거버넌스 수준	결혼이민자	96	3.515	0.961	1.135	0.259
	실무자	25	3.280	0.765		

<표 4-16>를 보면 대표성의 측정지표인 참여도와 의견반영도에 대한 응답의 불일치성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두 집단간 차이는 참여도에서만 유의미한 통계를 나타내었지만, 실질적으로 의견반영도 또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실무자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본 조사를 다문화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방문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은 참여도에 대해 보통에 가까운 3점에 응답함으로써 다른 변수에 대한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여 참여수준이 낮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의견 반영 정

도의 측정에서도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결혼이민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기관과 단체가 외부에 대해 결혼이민자들을 대표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결혼이민자들은 지원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6> 결혼이민자-실무자 간 대표성 측정지표 t 검증 결과

변수	집단구분	빈도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참여도	결혼이민자	94	3.181	1.311	3.003	0.003
	실무자	25	4.000	0.707		
이해대변도	결혼이민자	97	3.907	1.100	0.288	0.774
	실무자	25	3.840	0.746		
의견반영도	결혼이민자	97	3.546	1.146	1.872	0.064
	실무자	25	4.000	0.764		

2)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별 평균차이검증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면 거주지역별, 출신국가별, 한국 거주기간별, 연령별, 학력별, 자녀유무별, 한국국적취득여부별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미취득 상태인 결혼이민자가 88.4%로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한국국적으로 취득한 11.4%의 결혼이민자가 최소기대빈도인 25부에 미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거주기간별, 학력별, 자녀유무별로 구분한 집단 사이에 거버넌스의 특징적 변수 중에서 몇몇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 한국 거주기간별 집단 간 t 검증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 거주집단과 3년 이상 거주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특징적 변수에 대한 이들간의 평균차이 검증결과, <표 4-17>에서와 같이 부합도에 대해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29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합도의 빈도분석에서는 동

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 인처럼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다문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동화주의에 더 가깝게 인식하였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의 동화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고숙희(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들은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적응하였기 때문에 3년 미만 집단에 비해서 현재 정책이 자신들의 선호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다문화사회를 표방한 이래로 2008년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는데, 3년 이상 거주한 결혼 이민자들은 법률의 시행 전과 후를 모두 겪은 집단으로서 현재의 정책시행 상황을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17> 한국 거주기간별 집단 간 t 검증 결과

변수	거주 기간	빈도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접근성	3년 미만	56	3.670	1.153	0.682	0.497
	3년 이상	37	3.824	0.930		
대표성	3년 미만	54	3.657	1.023	0.696	0.488
	3년 이상	34	3.809	0.946		
상호의존성	3년 미만	53	3.554	0.931	0.570	0.052
	3년 이상	34	3.941	0.835		
부합도	3년 미만	52	3.697	0.977	2.221	0.029
	3년 이상	34	4.125	0.683		
만족도	3년 미만	53	3.805	1.047	1.971	0.167
	3년 이상	36	4.092	0.799		
거버넌스 수준	3년 미만	54	3.407	1.005	1.625	0.108
	3년 이상	35	3.743	0.861		

(2) 학력별 집단 간 F 검증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이하 집단, 고졸집단, 대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세 집단간의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4-18>과 같은

데, 먼저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중졸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 고졸 집단과 대졸 집단 사이에 95% 신뢰수준에서 각각의 유의수준이 0.023, 0.0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합도에 대해서도 중졸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 사이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 0.007로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서도 중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 고졸 집단과 대졸 집단 사이에 각각의 유의수준이 0.007, 0.01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각 변수에 대한 평균점을 낮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상호의존성과 부합도 및 거버넌스 수준에서 대졸 집단의 부정적 응답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신뢰도, 의사소통, 쌍방적 강의 방식의 세 가지가 있는데, 신뢰도에 비해서 의사소통과 쌍방적 강의방식에 대해서 대졸 집단이 부정적 응답을 한 경향을 보인다. 또,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에 비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집단은 현 정책의 다문화주의 체감도에 대해 보통 이하로 응답함으로써 매우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거버넌스 수준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졸 집단이 자신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실제 체감하는 상황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학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의 결혼 생활에서도 학력 격차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중 고학력자들은 이들에 비해 낮은 학력을 가진 한국남편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의 학력에 따라 그에 적절하면서 상이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8> 학력별 집단 간 F 검증 결과

1집단: 중졸이하 / 2집단: 고졸 / 3집단: 대졸

변수	학력 구분		평균차이	F 값	P
접근성	1(3.88)	2(3.83)	0.051	1.461	0.983
		3(3.45)	0.427		0.330
	2(3.83)	3(3.45)	0.375		0.359
대표성	1(3.87)	2(3.87)	0.006	2.295	1.000
		3(3.40)	0.462		0.209
	2(3.79)	3(3.26)	0.468		0.173
상호의존성	1(3.93)	2(3.90)	0.024	5.483	0.994
		3(3.28)	0.656*		0.023
	2(3.90)	3(3.28)	0.631*		0.018
부합도	1(4.20)	2(3.93)	0.270	5.457	0.489
		3(3.46)	0.743*		0.007
	2(3.93)	3(3.46)	0.473		0.097
만족도	1(4.03)	2(4.12)	0.095	2.557	0.931
		3(3.61)	0.413		0.269
	2(4.12)	3(3.61)	0.508		0.104
거버넌스 수준	1(3.84)	2(3.71)	0.134	6.495	0.850
		3(3.05)	0.790*		0.007
	2(3.71)	3(3.05)	0.656*		0.017

(3) 자녀유무 여부 집단 간 t 검증

각 변수에 대해 자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 상호의존성, 부합도, 거버넌스 수준 변수에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성은 유의수준 0.036, t값 2.135에서, 부합도는 유의수준 0.011, t값 2.601에서, 거버넌스 수준은 유의수준 0.004, t값 2.979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실무자와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부합도가 높으며, 거버넌스 수준 또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접근성과 대표성 및 만족도 변수는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들 변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절차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고, 상호의존성과 부합도, 거

버넌스 수준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수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전자의 변수보다 후자의 변수가 보다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 즉, 자녀가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보다 긍정적인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9> 자녀유무별 집단 간 t 검증 결과

변수	자녀 유무	빈도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접근성	없음	46	3.620	1.081	1.136	0.259
	있음	45	3.867	0.991		
대표성	없음	45	3.556	1.040	1.544	0.126
	있음	42	3.881	0.916		
상호의존성	없음	44	3.508	1.000	2.135	0.036
	있음	43	3.915	0.760		
부합도	없음	42	3.607	1.043	2.601	0.011
	있음	43	4.093	0.633		
만족도	없음	43	3.798	1.037	1.379	0.172
	있음	45	4.074	0.831		
거버넌스 수준	없음	43	3.233	0.996	2.979	0.004
	있음	45	3.811	0.821		

3) 거버넌스 변수의 상관분석

앞에서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적 변수인 접근성, 대표성, 상호의존성, 부합도, 만족도,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 빈도분석과 집단간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로서 이들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4-20>과 같다. 먼저 만족도가 평균 3.8993으로 가장 높고, 부합도의 평균은 3.8522로 두 번째로 높다. 접근성의 평균은 3.7172이고, 상호의존성이 3.7057로써 뒤를 잇고 있다. 대표성과 거버넌스 수준은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는데, 각각 3.5644와 3.5156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0> 거버넌스 변수의 기술통계량

거버넌스 변수	평균	표준편차	N
접근성	3.7172	1.06704	99
대표성	3.5644	0.85673	88
상호의존성	3.7057	0.93627	94
부합도	3.8522	0.88790	93
만족도	3.8993	0.94791	96
거버넌스 수준	3.5156	0.96096	96

부산광역시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적 변수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21>과 같다. 대체로 상관계수(r)값의 절대치가 0.20보다 클 경우에는 ‘아주 낮은 관계’라고 하고, $0.20 \leq r \leq 0.40$ 이면 ‘낮은 관계’, $0.40 \leq r \leq 0.70$ 이면 ‘비교적 높은 관계’, $0.70 \leq r \leq 0.90$ 이면 ‘높은 관계’, 0.90보다 크면 ‘아주 높은 관계’라고 한다.²¹⁾

이에 따르면, 상관계수(r)값이 0.70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는 부합도와 거버넌스 수준, 만족도와 부합도, 부합도와 상호의존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변수들의 상관계수값이 0.40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은 비교적 높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버넌스 수준과 접근성은 r값이 0.395로 나타나 낮은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핵심변수는 부합도로 나타났는데,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가 일치할수록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정책에 만족하고,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들과 상호의존성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1) 김호정, 《사회과학통계분석》, 삼영사, 2005, p.423

<표 4-21> 거버넌스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접근성	대표성	상호 의존성	부합도	만족도	거버넌스 수준
접근성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양쪽)						
	N	99					
대표성	Pearson 상관계수	0.566(**)	1				
	유의확률 (양쪽)	0.000					
	N	86	88				
상호 의존성	Pearson 상관계수	0.518(**)	0.642(**)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N	91	85	94			
부합도	Pearson 상관계수	0.460(**)	0.586(**)	0.709(**)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N	91	83	89	93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0.539(**)	0.684(**)	0.693(**)	0.709(**)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		
	N	94	86	92	93	96	
거버넌스 수준	Pearson 상관계수	0.395(**)	0.543(**)	0.612(**)	0.726(**)	0.649(**)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0.000	
	N	94	186	92	92	95	96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제 3 절 부산광역시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

1. 접근성 측면의 개선방안

접근성은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접근성을 뜻한다. 분석결과 접근성은 다른 변수에 비해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차의 용이성이 접근의 용이성보다 높게 나타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보다 이른 시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원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한 초기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24개소, 서울의 20개소는 물론이고, 경북이나 전남의 16개소, 충남의 15개소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다문화담당실무자가 작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내외에 불과하여, 과중한 업무에 처해있었다. 또한 다문화지원시민단체의 경우 몇몇 NGO를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미비하였고, 실제 순수 민간자원에 의해 운영되는 곳은 1곳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및 단체의 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결과 결혼이민자들의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한 접근경로는 지인의 소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지원서비스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한 접근성은 낮음을 뜻한다. 따라서 TV·신문, 인터넷, 관보·공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 때 다문화지원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존재여부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시각에서 적합한 접근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이 지원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를 선택할 때는 거리 등의 물리적 요건보다는 심리적 친밀감 등 정서적 요건을 고려하고 있다.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이들의 적응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2세의 학습부진 등 2차적인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접근할 때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대표성 측면의 개선방안

대표성은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가 결혼이민자들을 대표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대내적 관점에서 의견반영도와 대외적 관점에서 이해대변도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결혼이민자와 실무자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는데, 먼저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는 하지만, 자신들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결혼이민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이들을 대표하기도 한다고 인식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은 이민자이면서 여성이고, 한국국적의 미취득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수²²⁾이면서 약자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표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가 결혼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에 투입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을 실무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주여성긴급인권센터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상담업무를 하는 등 실무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상호의존성 측면의 개선방안

상호의존성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사이의 상호의존성으로 서로간의 신뢰도와 의사소통수준, 쌍방적 강의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상호의존성은 평균이 3.7점 정도로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쌍방적 강의방식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 신뢰도와 의사소통수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강의방식이 쌍방적이라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강의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만

22) 일반적으로 ‘소수자(minority)’의 용어에는 ‘적은 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약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사용된다.

하다.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결혼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실무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대상이 된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자원봉사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특별한 봉사정신이나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측정지표에 비해서 의사소통 수준이 조금 낮게 나타난 편인데, 이는 언어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 방문하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강의의 필요성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만큼 언어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의사소통 수준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각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고는 있지만 일부언어에 국한되어 있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통·번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무자들을 갖추어서 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할 때에 자유로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4. 부합도 측면의 개선방안

부합도는 정책의 선호도와 체감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점이 3.85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주의에 비해 동화주의를 선호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실질적으로 동화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부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의 동화주의의 선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화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한국 사회로의 적응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적 상황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정시기까지 동화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속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분석결과 학력이 높은 결혼이민자일수록 다문화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앞으

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결혼이민자들의 정책선호를 조사하여 이에 맞추어 나간다면 부합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부합도에 대한 실태는 결혼이민자와 대비되는 서구의 이민자와 비교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서구라 함은 임의적으로 영어권 백인을 지칭하는데,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한국인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서 결혼이민자와는 차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한국에 이주해서 산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문화를 배제하고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려는 성향이 약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들 스스로도 동화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해 나가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맞게 되는 우리의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의 동화정책은 실질적으로 주류문화를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적 다문화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세계적 흐름의 하나로 다양한 이문화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주체는 대표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있다. 참여정부 시기 다문화 사회를 표방한 이래로 이에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국가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의 정책적인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되어 왔는데, 이는 다문화에서의 ‘문화’라는 개념이 삶의 방식으로서 정착과 지속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행정은 내부적으로는 효율화를, 외부적으로는 민주화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데 거버넌스 체제를 다양한 참여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이는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 가능한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분야에서도 거버넌스 체제가 요구된다.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수준의 로컬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문화의 유입경로인 부산광역시의 다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문, 부산의 다문화적 실태부문, 그리고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실증적 분석부문으로 나뉜다. 각 분야의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연구와 함께 이를 토대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위한 변수를 설정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다문화지원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실무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이고, 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선정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변수는 접근성, 대표성, 상호의존성, 부합도, 만족도, 거버넌스 수준의 여섯 가지이다. 먼저 접근성은 다문화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접근성으로 접근의 용이

성과 절차의 용이성으로 측정하였다. 대표성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지원 기관 및 단체의 대표성으로 이해대변도와 의견반영도로 측정하였다. 상호의존성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지원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신뢰와 의사소통수준 및 쌍방향 강의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부합도는 결혼이민자들의 정책의 선호도와 체감도의 일치성으로 동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체감도로 측정하였다. 만족도는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만족도로써 기관방문목적의 만족도, 생활개선도, 지속적 참여의향으로 측정하였다. 거버넌스 수준은 현 단계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와 실무자의 협력적 관계에서 운영되는 수준으로써 거버넌스 수준과 거버넌스 이행단계로 측정하였다.

선정한 변수들을 토대로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에는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별로 분류된 결혼이민자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검증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변수에는 거주지역, 출신국가, 한국국적취득여부, 한국 거주기간, 연령, 학력, 자녀유무여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인식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도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던 참여도를 제외하면, 결혼이민자와 실무자간의 인식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실무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인식하거나, 서로 다른 시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서로간의 신뢰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버넌스 체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적 특성변수별 결혼이민자의 인식은 한국 거주기간, 학력, 자녀유무별 집단 사이에 몇몇 특징적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각 집단별로 초점을 달리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각 특징적 변수들은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적 구성요소로써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관분석결과 부합도와 상호의존성, 부합도와 만족도, 부합도와 거버넌스 수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핵심변수는 부합도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거버넌스의 특징적 변수 중에서 하위개념 요소가 되는 접근성, 대표성, 상호의존성, 부합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접근성 측면의 개선을 위해 첫째,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양적 성장지원 둘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의 홍보 셋째, 다문화지원 기관 및 단

체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대표성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를 실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상호의존성 측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언어의 통·번역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합도 측면의 개선을 위해 주기별로 결혼이민자들의 정책선호를 조사하여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 있는 현 단계의 다문화적 상황과 정책적 실태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행정학에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거버넌스 경향의 선행연구(거버넌스, 정책공동체, 민·관 협력 등)들은 다문화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분석은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 분석을 위해 이루어져 왔지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현 단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 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를 전제하고 있는데, 정책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정부 및 NGO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나 정책대상집단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 필수적인 결혼이민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정책일수록 성공적인 정책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책결정과정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실무자와 결혼이민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대상은 정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 한정하였는데, 이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이면서 종합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대상을 여성결혼이민자는 물론이고, 남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적 변수를 선정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변수선정의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거버넌스 연구에서 정부와 NGO의 관계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정책 분야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양자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버넌스의 범위를 좁히면, 정부와 NGO 및 기업 등 3자 이상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지원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세 영역간의 관계를 가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다문화지원 시민단체가 부족하고, 각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실무자도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으로 그 수가 결혼이민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자간의 네트워크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3자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의 유용성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이 투입되어 반영되면, 결정과정에서의 비용은 높아지지만, 정책집행의 성공률은 높아지고, 정책의 불응과 같은 저항은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정책집행과정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정책의 전과정으로 확대하여 이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를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향후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I. 단행본 및 보고서

1. 다문화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평가》 (2009)

김수연·이정희·남미경·임경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

김은미·양옥경·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출판 (2009)

네이션 글레이저,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종남·최현미 역,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결혼이민자》, 도서출판 경진(2009)

박대식·최경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박병섭, 《다문화주의 철학》, 실크로드 (2008)

변화순·이미정·김혜영·황정미·이선형,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정혁,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올아카데미 (2007)

전숙자·박은아·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그린 (2009)

최종렬 외,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사회학회 (2008)

홍기원, 《이주민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Eunsook Lee Zeilfelder, 《한국사회와 다문화 가족》,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역, 양서원 (2007)

2. 거버넌스 관련

-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 임희섭·양중희,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출판 (1998)
- 정용덕 외,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2002)
- 주성수, 《시민사회와 NGO논쟁 -주요개념·모델 및 이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3. 조사방법론 관련

- 김 구,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활용》, 비앤엠북스 (2008)
- 김호정, 《사회과학통계분석》, 삼영사 (2003)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03)
- 이준형, 《조사방법론》, 대영문화사 (2006)
-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2009)
- 한승준, 《조사방법의 이해와 SPSS 활용》, 대영문화사 (2006)

II. 학술논문

1. 다문화 관련

-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pp.5~34,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6)
- 강휘원,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구미시 2007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7~96, 한국행정학회 (2007)
- 고숙희, 「정부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모색: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1호, pp.25~45,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제27권 3호, pp. 29~53, 한국인문사회과학회(2003)

- 권승,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담당공무원의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집, pp. 35~6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 김미나, 「다문화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제47권 4호, pp.193~223,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 김선미, 「이주·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pp.189~228,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2009)
- 김세훈,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61~470,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pp.129~159,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 김옥일·채경진·박광국, 「다문화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pp.115~135, 서울행정학회 (2009)
- 김헌민·김유미·박지현,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601~622, 한국행정학회 (2008)
- 김형수,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pp.127~151, 한국동북아학회 (2008)
- 김혜순, 「‘정부 주도 다문화’의 명암: 시혜적 ‘다문화’, 요원한 다문화사회」,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논문집, pp.611~625, 한국사회학회 (2009)
- 범령령, 「한국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Conference 자료, pp.28~41, 한국행정학회 (2009)
- 설동훈,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1~20,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
- 양기호,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2호, pp.67~85,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 양기호,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Conference 자료, pp.117~134, 한국행정학회 (2009)

- 오경석, 「다문화와 민족-국가: 상대화인가, 재동원인가?」, 공간과 사회, 제28호, pp.98~121, 한국공간환경학회 (2007)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pp.29~49, 한국행정학회 (2008)
- 원숙연·박진경,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향성 탐색」,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65~879, 한국행정학회 (2009)
- 윤갑정,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제28권, pp.1~16,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4)
-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pp.251~291, 한국사회학회 (2007)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pp.72~103, 한국사회학회 (2008)
- 이경은·박창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족과 문화, 21집 4호, pp.119~143, 한국가족학회 (2009)
- 이광석,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입장벽과 그 해결에 관한 연구 -언어복지 제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3호, pp.161~186,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3호, pp.215~236, 한국가족법학회 (2009)
-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호, pp.209~236, 한국법학회 (2008)
- 이용승, 「특집 : 현대의 다문화가족 ;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Policy on Multicultural Family in Germany)」, 민족연구, 제31권, pp.113~129, 한국민족연구원 (2007)
- 이종열·황정원·노지영,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접근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5~95, 한국행정학회, (2008)

- 전영평,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pp.9~27, 한국행정학회 (2008)
-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pp.147~174,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 조석주,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강화방안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와 전망, pp.271~304,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 주효진, 「아시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9~104, 한국행정학회 (2008)
- 지종화·정명주·김도경, 「한국의 다문화 국가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 pp.109~136,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 진은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 제95집, pp.255~283, 한국철학회 (2007)
- 차용호,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pp.165~199,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09)
-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pp.51~77, 한국행정학회 (2008)
- 최현, 「한국인의 다문화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pp.147~227,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
- 최현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35, pp.343~375,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pp.463~486, 한국행정학회 (2008)
- 한승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67~87, 한국행정학회 (2008)
- 한승준,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pp.269~291, 서울행정학회 (2009)
- 한영혜,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제71집, pp.155~183, 한국사회사학회 (2006)

- 허남린, 「일반상식 속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속의 일반상식」, 교육문화연구, 제 15-2호, pp.7~2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 홍기원,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909~928, 한국행정학회 (2007)
-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와 평화, pp.13~34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09)

2. 거버넌스 관련

- 강명구, 「정부와 NGO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mutual empowerment)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pp.47~61, 정부와NGO (2000)
- 권경득·임정빈·장우영,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형성요인: 충청권 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회 및 제3회 한일지방자치 국제세미나 1, pp.615~640,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 김 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유형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pp.51~75, 한국행정학회 (2006)
- 김명숙,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3호, pp.325~347, 서울행정학회 (2005)
- 김상구·이원일,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 환경NGO간의 관계유형: 후견인적 관계유형? 혹은 무관심적 관계유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pp.59~81,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 김상구·이원일, 「현 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부산광역시의 복지 NGO와 환경NGO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 pp.169~183,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 김상구·최병대,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NGO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명지대교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3호, pp.123~143,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 김순은,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요건: 신공공성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3권 제2호, pp.151~189,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 김용민, 「지역사회의 협력거버넌스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정읍시 방사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1집 제1호, pp.133~16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0)
- 김종래·강제상, 「국정관리와 NGO의 역할: 환경NGO와 정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3~57, 한국행정학회 (2000)
- 김준기·김정부, 「NGO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정논총 제39권 제3호, pp.195~233, 한국행정연구소 (2001)
- 김형양,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1호, pp.29~47, 한국정부학회 (2004)
- 김환철·김세훈, 「지역 현안에 대한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 연구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기지 활용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1호, pp.197~215,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 라미경,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3호, pp.91~107,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 문신용, 「e-거버넌스와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2호, pp.59~84,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 민현정, 「지역협동 사례를 통해 본 일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과 한계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2호, pp.55~81,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 박상필,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 -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15~435, 한국행정학회 (2002)
- 박성훈·임승호·김중술, 「시민단체의 활동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정비심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1호, pp.221~253,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 박희봉,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pp.1~23,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 박희봉·김명환,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pp.175~196, 한국행정학회 (2000)
- 복문수, 「거버넌스시대의 파트너십과 NGO의 성찰 -전라남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NGO)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1호, pp.25~51,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
- 신희영,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 구성과 지방정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3호, pp.1~28, 서울행정학회 (2005)
- 오재일,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56호), pp.3~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유재원·소순창,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pp.41~63, 한국행정학회 (2005)
- 이도형, 「로컬 복지 거버넌스 전략: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pp.221~238, 한국행정학회 (2004)
-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pp.321~338, 한국행정학회 (2002)
- 이병수·김일태, 「지방정부와 NGO간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 공무원과 NGO활동가들의 인식, 태도,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14집 제2호, pp.27~41, 한국도시행정학회 (2001)
- 이숙중·김희경·최준규,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下) pp.591~608, 한국행정학회 (2007)
- 이종원,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pp.329~340, 한국행정학회 (2005)
- 이종원,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지방거버넌스 형성론과 현실의 방법론」, 한국거버넌스학회 2003년 창립기념학술대회, pp.185~201, 한국거버넌스학회 (2003)
- 이현출,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pp. 217~527, 한국정치학회 (2001)
- 전영평·장임숙,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 기여와 한계」,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pp.281~300, 한국행정학회 (2004)

- 최병대·김상구, 「정책과정에서의 NGO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1호, pp.217~241, 한국정책학회 (2004)
-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권, pp.111~125, 한국거버넌스학회 (2003)
- 최진혁, 「로컬거버넌스시대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 NGO의 역할과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127~151,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 한승준, 「분권화시대의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pp.281~302, 한국행정학회, (2004)
- 한승준,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3호, pp.95~116, 한국행정학회 (2007)

III. 인터넷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다문화 행복스케치 <http://multi.busan.go.kr/>
-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bfsc.busan.go.kr/>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http://www.bwf.re.kr/>
- 부산여성문화회관 <http://wcc.busan.go.kr/>
-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http://www.yjingu.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http://www.samsan2121.or.kr/>
- 중앙일보 <http://www.joinmsn.com/>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
- 해운대구청 <http://www.haeundae.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부록-설문지>

다문화 거버넌스 수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결혼이민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부산광역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09월

조사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성 은 혜

(통상행정학과 석사과정)

연락처 010-9382-3631

지도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김 상 구

1-1. 귀하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이나 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종합사회복지관 ③ 부산여성회 ④ 이주여성인권센터
⑤ 시민사회단체(NGO) ⑥ 결혼이민자가족모임 ⑦ 이웃 ⑧ 기타()

1-2. 위의 질문에서 응답한 곳을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②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③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④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아서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아서 ⑥ 기타()

1-3. 선택한 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TV·신문 광고 및 홍보 ② 인터넷 ③ 관보·공보
④ 지인소개 ⑤ 기타()

4-2	귀하가 다문화지원기관(단체)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참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좋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3	귀하는 앞으로 다문화지원기관(단체)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처럼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5-2	귀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민자들이 태어난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즐기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3	현재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지원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4	현재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지원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5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는 부산광역시의 다문화 정책의 거버넌스 수준(실무자와 결혼이민자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2	다문화 사회의 거버넌스 수준이 진입단계, 이행단계, 정착단계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 한국의 다문화 거버넌스 단계는 정착단계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강서구 ② 금정구 ③ 기장군 ④ 남구 ⑤ 동구 ⑥ 동래구 ⑦ 부산진구
 ⑧ 북구 ⑨ 사상구 ⑩ 사하구 ⑪ 수영구 ⑫ 서구 ⑬ 연제구 ⑭ 영도구
 ⑮ 중구 ⑯ 해운대구 ⑰ 기타()

7-2. 귀하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 ① 중국(한족) ② 중국(조선족) ③ 베트남 ④ 인도네시아 ⑤ 필리핀
⑥ 일본 ⑦ 우즈베키스탄 ⑧ 러시아 ⑨ 카자흐스탄 ⑩ 캄보디아
⑪ 파키스탄 ⑫ 네팔 ⑬ 인도 ⑭ 이란 ⑮ 기타()

7-3. 귀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4. 귀하가 한국에서 사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7년 미만 ⑤ 7년 이상 ~ 9년 미만 ⑥ 9년 이상

7-5.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7-6.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7-7.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① 없다 ② 있다(명)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문화 거버넌스 수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실무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부산광역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석사학위 논문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09월

조사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성 은 혜

(통상행정학과 석사과정)

연락처 010-9382-3631

지도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김 상 구

1-1. 결혼이민자(수요자)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이나 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종합사회복지관 ③ 부산여성회 ④ 이주여성인권센터
⑤ 시민사회단체(NGO) ⑥ 결혼이민자가족모임 ⑦ 이웃 ⑧ 기타()

1-2. 위의 질문에서 응답한 곳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리적 인접성 ② 심리적 친밀감 ③ 개방성 ④ 문제해결 능력
⑤ 프로그램의 체계성 ⑥ 기타()

1-3. 결혼이민자들이 귀하가 근무하시는 기관(단체)을 찾아오는 경로는 주로 무엇입니까?

- ① TV·신문 광고 및 홍보 ② 인터넷 ③ 관보·공보
④ 지인소개 ⑤ 기타()

4-1	다문화가족지원기관(단체)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2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지원기관(단체)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참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3	다문화 프로그램에 한번 이상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지속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처럼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2	귀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민자들이 태어난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즐기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3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지원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4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지원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5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는 부산의 다문화 정책의 거버넌스 수준(실무자와 결혼이민자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2	다문화 사회의 거버넌스 수준이 진입단계, 이행단계, 정착단계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 부산의 다문화 거버넌스 단계는 정착단계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의 근무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강서구 ② 금정구 ③ 기장군 ④ 남구 ⑤ 동구 ⑥ 동래구 ⑦ 부산진구
 ⑧ 북구 ⑨ 사상구 ⑩ 사하구 ⑪ 수영구 ⑫ 서구 ⑬ 연제구 ⑭ 영도구
 ⑮ 중구 ⑯ 해운대구 ⑰ 기타()

Survey for analysi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level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Hello

This research is being held for gathering the basic information on multi-cultural policy governan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is is an **anonymous** research and your answers is statistically processed only using for study purposes.

I would be appreciate you answering the questions.

September. 2010.

Researcher Korea Maritime University Graduates School Seong. E. H.
(Department of Maritime Administration Master Course)

Contact us. 010-9382-3631

Advisor Korea Maritime University Professor Kim. S. G.

1-1. Where was the first place when you needed to solve a problem with adaptation in South Korea or family issues?

- ①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② Social Welfare Center
- ③ Busan Women Organization ④ Migrant Women Human Rights Center
- ⑤ Non-Government Organization ⑥ Marriage immigrants family gathering
- ⑦ Neighbor ⑧ Others()

1-2. What is the best reason for choosing the place you selected at the question 1?

- ① Distance ② Feel comfortable ③ Openness ④ Ability to solve problems
- ⑤ Quality of programs ⑥ Others()

1-3. How did you know the place you selected?

- ① Advertisement or promotion on TV, Newspaper
- ② Internet ③ Official gazette or official report
- ④ Introduction of an acquaintance ⑤ Others()

3-3	If you are taking classes provided by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is it bilateral teaching by having conversa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	①	②	③	④	⑤
4-1	Are you satisfied with solving your problem in Center which you visited?	①	②	③	④	⑤
4-2	After you visit and join a program provided by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is your life got better than before?	①	②	③	④	⑤
4-3	Do you have an intention to constantly visit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and participate in programs?	①	②	③	④	⑤
5-1	Do you think a Korea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a way for the government to help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 order to adapt to Korea like a Korean?	①	②	③	④	⑤
5-2	Do you think a Korea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a way for the government to help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 order to enjoy and preserve their native culture?	①	②	③	④	⑤
5-3	Is the program which you are taking helpful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to adapt to Korea?	①	②	③	④	⑤
5-4	Is the program which you are taking helpful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to admit and maintain their native culture?	①	②	③	④	⑤
5-5	Do you think a current Korea multi-cultural policy is suitable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wants?	①	②	③	④	⑤
6-1	What do you think about a governance level of a Busan multi-cultural policy? (Level of running a multi-cultural program a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taff an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①	②	③	④	⑤

6-2	If a governance level of multi-cultural society is developing according to an entry phase, an implementation phase and a settlement phase, do you think the governance level has developed into a settlement phase?	①	②	③	④	⑤
-----	---	---	---	---	---	---

7-1. Where are you living?

- ① Gangseo-gu ② Geumjeong-gu ③ Gijang-gun ④ Nam-gu ⑤ Dong-gu
 ⑥ Dongnae-gu ⑦ Busanjin-gu ⑧ Buk-gu ⑨ Sasang-gu ⑩ Saha-gu
 ⑪ Suyeong-gu ⑫ Seo-gu ⑬ Yeonje-gu ⑭ Yeongdo-gu ⑮ Jung-gu
 ⑯ Haeundae-gu ⑰ Others()

7-2. Which country are you from?

- ① China(Han) ② China(ethnic Koreans in China) ③ Vietnam ④ Indonesia
 ⑤ the Philippines ⑥ Japan ⑦ Uzbekistan ⑧ Russia ⑨ Kazakhstan
 ⑩ Cambodia ⑪ Pakistan ⑫ Nepal ⑬ India ⑭ Iran ⑮ Others()

7-3. Did you get Korean citizenship?

- ① Yes ② No

7-4. How long have you been in South Korea?

- ① under 1 year ② over 1 year ~ under 3 years
 ③ over 3 years ~ under 5 years ④ over 5 years ~ under 7 years
 ⑤ over 7 years ~ under 9 years ⑥ over 9 years

7-5. How old are you?

- ① the 20's ② the 30's ③ the 40's ④ the 50's ⑤ the 60's

7-6. What is your educational background?

- ① Graduation from elementary school ② Graduation from middle school
 ③ Graduation from high school ④ Graduation from college or university
 ⑤ Graduation from graduate school

7-7. Do you have children? If yes, how many do you have?

- ① No ② Yes(person)

Thank you for your time.

(結婚移民者用)

アンケート調査

こんにちは、お忙しい中アンケート調査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調査は、釜山広域市における多文化政策のガバナンスのレベルを分析するための基礎データを収集するために行なわれます。本日は、ご協力いただくことで、大変貴重なデータを収集でき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本日の調査は無記名で実施されますので、ご協力いただいた皆様の名前が出ることはありません。また、今日の調査は、本研究以外の目的の使用することはございませんので、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2010年09月

韓国海洋大学大学院 通常行政学科修士課程 成 恩 惠

連絡先 010-9382-3631

指導教授 韓国海洋大学校海洋行政学科 金 相 九

1.1 あなたが韓国社会における適応や家庭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最初に訪れた場所はどこですか。

- ①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② 総合社会福祉館 ③ 釜山女性会
④ 移住女性の人権センター ⑤ 市民社会団体(NGO/NPO) ⑥ 結婚移民者家族の集まり
⑦ 隣の人 ⑧ その他()

1.2 上記1.1の質問に答えたところを選択した理由は何ですか。

- ① 距離が近いので ② 心を楽にさせてくれるので ③ いつも開放されているので
④ 問題をうまく解決してくれるような気がして ⑤ プログラムの内容が良くて
⑥ その他()

1.3 上記1.1の場所はどのように知りましたか。

- ① テレビや新聞広告、コマーシャル ② インターネット ③ 官報・公報
④ 知人の紹介 ⑤ その他()

4.2	多文化支援機関(団体)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後、その前と比べて韓国におけるあなたの生活はより便利になりましたか。	①	②	③	④	⑤
4.3	あなたは多文化支援機関(団体)から運営されているプログラムにこれからも引き続き参加したい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5.1	あなたは韓国政府による結婚移民者のための多文化政策が韓国人と同じ生活ができるようにすべきだ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5.2	あなたは韓国政府による多文化政策が結婚移民者たちの母国の文化を楽しんで保存できるようにすべきだ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5.3	今あなたが参加している多文化支援機関(団体)におけるプログラムは、結婚移民者たちが韓国社会にうまく適応できるように組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5.4	今あなたが参加している多文化支援機関(団体)のプログラムは、結婚移民者たちによって母国の文化を認めながら守れるように組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5.5	現在韓国における多文化政策は、結婚移民者たちが望んでいる方法で行われている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6.1	あなたは釜山広域市の多文化政策におけるガバナンスのレベル(担当者と結婚移民者が互いに協力しながら多文化プログラムを行なっている程度)が高い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6.2	もし、多文化社会におけるガバナンスのレベルが、進入段階や、移行段階、定着段階へ発展するとすれば、韓国における多文化ガバナンスのレベルは定着段階だと思いますか。	①	②	③	④	⑤

7.1 あなたが居住している地域はどこですか。

- ① 江西区 ② 金井区 ③ 機張郡 ④ 南区 ⑤ 東区 ⑥ 東萊区 ⑦ 釜山津区
 ⑧ 北区 ⑨ 沙上区 ⑩ 沙下区 ⑪ 水營区 ⑫ 西区 ⑬ 連提区 ⑭ 影島区
 ⑮ 中区 ⑯ 海雲台区 ⑰ その他()

7.2 あなたの出身国はどこですか。

- ① 中国（漢族） ② 中国（朝鮮族） ③ ベトナム ④ インドネシア ⑤ フィリピン
⑥ 日本 ⑦ ウズベキスタン ⑧ ロシア ⑨ カザフスタン ⑩ カンボジア ⑪ パキスタン
⑫ ネパール ⑬ インド ⑭ イラン ⑮ その他()

7.3 あなたは、韓国の国籍を取得していますか。

- ① はい ② いいえ

7.4 あなたが韓国で居住している期間はどのぐらいですか。

- ① 1年未満 ② 1年以上 ～ 3年未満 ③ 3年以上 ～ 5年未満
④ 5年以上 ～ 7年未満 ⑤ 7年以上 ～ 9年未満 ⑥ 9年以上

7.5 あなたの年齢層は何代ですか。

- ① 20代 ② 30代 ③ 40代 ④ 50代 ⑤ 60代

7.6 あなたの学歴は何ですか。

- ① 小学校卒業 ② 中学校卒業 ③ 高等学校卒業 ④ 大学卒業 ⑤ 大学院以上卒業

7.7 あなたは、お子さんがいますか。いる場合、何人ですか。

- ① いる(名) ② ない

以上です。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分析多文化胁迫水平的问卷调查

大家好！

此次调查是为了分析釜山广域市的多文化政策胁迫的水平，以收集基本资料为目的。本调查实行不记名制，只用于数据统计后的研究。

希望大家在百忙之中抽出点时间，城市的填写此项问卷调查。

2010年 09月

调查者：韩国海洋大学研究生 成恩惠

(通商行政学科 在读硕士)

手机： 010-9382-3631

指导教师 韩国海洋大学 海洋行政学科 金相九

1-1. 请问您在适应社会或家庭的过程中遇到的问题，首先会向哪一部门求助？

- ① 多文化家庭支援中心 ② 综合社会福利馆 ③ 釜山女性协会 ④ 移住女性人权中心
⑤ 市民社会组织(NGO) ⑥ 结婚移民者家族聚会 ⑦ 邻居 ⑧ 其它()

1-2. 选择前一项理由是什么？

- ① 距离比较近 ② 因为会让我的内心比较舒服
③ 因为那里的大门永远都是为我们敞开的 ④ 我想会很好地解决问题
⑤ 项目内容很好 ⑥ 其它()

1-3. 通过什么途径知道您所选的地方？

- ① 电视，新闻广告以及宣传 ② 网络 ③ 告示，公报
④ 好友介绍 ⑤ 其它()

1-4. 您第一次求助多文化支援机关或群体的最主要原因是什么？

- ① 为了听韩国与讲座 ② 为了交朋友
③ 为了解决夫妻之间的问题 ④ 为了学习韩国文化
⑤ 为了解决育儿问题 ⑥ 其它()

※ 在以下的问题中您认为最符合的号码后面打上 √ 符号

好吗	提 问 内 容	低		中		高
		不是	基本不是	普通	有一点是	是
1-5	您在遇到困难时向多文化支援机关（群体）求助的过程容易吗？	①	②	③	④	⑤
1-6	您在多文化支援机关（群体）申请课程或求助时，过程和程序简单吗？	①	②	③	④	⑤
2-1	多文化机关（群体）提供的活动您参加的次数是？	①	②	③	④	⑤
2-2	如果您曾经有参加过，那是几次？	()次				
2-3	您认为曾访问过的机关（群体），是对于结婚移民者（需要者）的利益所运营的吗？	①	②	③	④	⑤
2-4	您认为机关（团体）是否在运营的活动中反映出结婚移民者（需要者）的意见呢？	①	②	③	④	⑤
3-1	您信任曾求助过的机关（群体）的工作人员吗？	①	②	③	④	⑤
3-2	您认为与机关（群体）的工作人员交流是很顺畅的吗？	①	②	③	④	⑤
3-3	如果您在听多元化机关或群体提供的讲座，认为讲师与学生的交流和学习达到共识了吗？	①	②	③	④	⑤
4-1	您向多文化支援机关（群体）求助的问题得到了满意地解决吗？	①	②	③	④	⑤
4-2	您在访问多元化支援机关（群体）后参加活动时，比没参加活动时在韩国生活更好些了吗？	①	②	③	④	⑤
4-3	您在今后，有没有想持续访问多元化支援机关（群体）并参加活动的意向？	①	②	③	④	⑤
5-1	您认为韩国的多文化政策是政府为帮助结婚移民者可以像韩国人一样适应生活的方法吗？	①	②	③	④	⑤
5-2	您认为韩国的多文化政策应该是政府为了帮助结婚移民者可以享受和保存出生国家（您出生的国家）的固有的文化的方式吗？	①	②	③	④	⑤
5-3	您认为现在参加的多文化支援机关（群体）提供的活动对于结婚移民者们在适应韩国生活有帮助吗？	①	②	③	④	⑤
5-4	您认为现在参加的多文化支援机关（群体）里提供的活动，是否认正和帮助持续结婚移民者的出身国的文化呢？	①	②	③	④	⑤
5-5	您认为现在实行中的韩国多文化政策，是否形成结婚移民者们希望的生活方式？	①	②	③	④	⑤
6-1	您认为釜山广域市的多文化政策거버넌스의水平（在工作人员和结婚移民者共同协力的关系下运营的多文化活动的程度）怎么样？	①	②	③	④	⑤

6-2	假设多文化社会的胁迫已经发展到进入阶段、实行阶段、定居阶段时，你认为韩国的多文化胁迫是否发展到了定居的阶段呢？	①	②	③	④	⑤
-----	---	---	---	---	---	---

7-1. 您现在住在什么地方？

- ① 강서구 江西区 ② 금정구 金亭区 ③ 기장군 济章区 ④ 남구 南区 ⑤ 동구 东区
 ⑥ 동래구 东来区 ⑦ 부산진구 釜山镇区 ⑧ 북구 北区 ⑨ 사상구 沙上区
 ⑩ 사하구 沙下区 ⑪ 수영구 水营区 ⑫ 서구 西区 ⑬ 연제구 莲堤区
 ⑭ 영도구 影岛区 ⑮ 중구 中区 ⑯ 해운대구 海云台区 ⑰ 기타 其它()

7-2. 您出生于哪个国家？

- ① 중국(한족)中国(汉族) ② 중국(조선족)中国(朝鲜族) ③ 베트남 越南
 ④ 인도네시아 印度尼西亚 ⑤ 필리핀 菲律宾 ⑥ 일본 日本
 ⑦ 우즈베키스탄 乌兹别克斯坦 ⑧ 러시아 俄罗斯 ⑨ 카자흐스탄 嘎家和斯坦
 ⑩ 캄보디아 柬埔寨 ⑪ 파키스탄 巴基斯坦 ⑫ 네팔 尼泊尔 ⑬ 인도 印度
 ⑭ 이란 伊朗 ⑮ 기타 其它()

7-3. 您拥有韩国国籍吗？

- ① 是 ② 不是

7-4. 您在韩国生活了多久？

- ① 未滿1年 ② 1年以上 ~ 未滿3年 ③ 3年以上 ~ 未滿5年
 ④ 5年以上 ~ 未滿7年 ⑤ 7年以上~未滿9年 ⑥ 9年以上

7-5. 请问您的年龄是？

- ① 20多岁 ② 30多岁 ③ 40多岁 ④ 50多岁 ⑤ 60多岁

7-6. 您的学历是？

- ① 小学毕业 ② 中学毕业 ③ 高中毕业 ④ 大学毕业 ⑤ 研究生毕业

7-7. 您有子女吗？几名？

- ① 没有 ② 有(名)

感谢您在百忙之中认真填写问卷调查！

BẢN KHẢO SÁT PHÂN TÍCH SỰ QUẢN LÝ VẤN ĐỀ ĐA VĂN HÓA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Thân mến,

Cuộc khảo sát này được thực hiện để tổng hợp thông tin về chính sách quản lý vấn đề đa văn hóa của trung tâm thành phố Busan.

Đây là một cuộc khảo sát mang tính chất nghiên cứu và câu trả lời của bạn sẽ được thống kê và chỉ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học tập.

Chúng tôi rất cảm kích về sự nhiệt tình trả lời các câu hỏi của bạn.

Tháng 9, năm 2010

Nhà nghiên cứu,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School Hàn Quốc **Seong. E. H.**

(Cục Hàng Hải, Khóa Thạc sĩ Quản Trị)

Liên hệ: 010-9382-3631

Nhà cố vấn, giáo sư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Hàn Quốc **Kim. S. G.**

1-1. Nơi nào là nơi đầu tiên mà bạn nghĩ đến khi bạn cần sự giúp đỡ về vấn đề thích nghi với cuộc sống ở Hàn Quốc hay các vấn đề gia đình?

- | | |
|-------------------------------|--|
| ① Trung tâm hỗ trợ đa văn hóa | ② Trung tâm phúc lợi xã hội |
| ③ Hiệp hội phụ nữ Busan | ④ Trung tâm bảo trợ nhân quyền người di cư dành cho Phụ nữ |
| ⑤ Các tổ chức phi chính phủ | ⑥ Các tổ chức hôn nhân gia đình |
| ⑦ Hàng xóm | ⑧ Khác (...) |

1-2. Lý do vì sao bạn chọn nơi này? (ở câu trên)

- | | | |
|-------------------------------------|--------------------------|---------------|
| ① Gần nơi ở | ② Cảm thấy thoải mái | ③ Thân thiện |
| ④ Có khả năng giải quyết vấn đề tốt | ⑤ Chất lượng phục vụ tốt | ⑥ Khác (...) |

1-3. Làm sao bạn biết được nơi đó?

- | | |
|--|------------------------|
| ① Qua các chương trình quảng cáo trên tivi, báo chí... | ② Internet |
| ③ Các bản thông báo | ④ Thông qua người quen |
| ⑤ Khác (...) | |

4-3	Bạn có cố gắng và quyết tâm để tham gia vào các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①	②	③	④	⑤
5-1	Bạn có cho rằng chính sách hòa nhập đa văn hóa là một cách để từng bước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nhập cư thích nghi với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	①	②	③	④	⑤
5-2	Bạn có cho rằng chính sách hòa nhập đa văn hóa là một cách để từng bước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nhập cư vừa hòa nhập với nền văn hóa mới lại vẫn giữ được văn hóa gốc của mình ?	①	②	③	④	⑤
5-3	Chương trình mà bạn đang tham gia có giúp ích được cho những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hôn nhân từng bước sang Hàn Quốc ?	①	②	③	④	⑤
5-4	Chương trình mà bạn đang tham gia có giúp cho những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giữ được bản sắc văn hóa gốc của mình ?	①	②	③	④	⑤
5-5	Bạn có cho rằng chính sách đa văn hóa hiện tại của chính phủ là thích hợp cho những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①	②	③	④	⑤
6-1	Đánh giá của bạn về cấp độ quản trị của chính sách đa văn hóa Busan ? (Cấp độ về chương trình và mối quan hệ giữa nhân viên và những học viên tham gia)	①	②	③	④	⑤
6-2	Nếu cấp độ quản trị phát triển đa văn hóa được phát triển theo các bước : Tiếp nhận, Thi hành, Giải quyết. Bạn có cho rằng cấp độ hiện tại của chính sách đã đạt mức giải quyết ?	①	②	③	④	⑤

7-1. Bạn hiện đang sống ở đâu?

- ① Gangseo-gu ② Geumjeong-gu ③ Gijang-gun ④ Nam-gu ⑤ Dong-gu ⑥ Dongnae-gu
 ⑦ Busanjin-gu ⑧ Buk-gu ⑨ Sasang-gu ⑩ Saha-gu ⑪ Suyeong-gu ⑫ Seo-gu
 ⑬ Yeonje-gu ⑭ Yeongdo-gu ⑮ Jung-gu ⑯ Haeundae-gu ⑰ Others()

7-2. Bạn đến từ đất nước nào?

- ① China(Han) ② China(ethnic Koreans in China) ③ Vietnam ④ Indonesia
 ⑤ the Philippines ⑥ Japan ⑦ Uzbekistan ⑧ Uzbekistan ⑨ Kazakhstan
 ⑩ Cambodia ⑪ Pakistan ⑫ Nepal ⑬ India ⑭ Iran ⑮ Others()

7-3. Bạn đã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chưa?

- ① Yes ② No

7-4. Bạn đã sống ở Hàn Quốc được bao lâu?

- ① dưới 1 năm ② trên 1 năm ~ dưới 3 năm ③ trên 3 năm ~ dưới 5 năm
④ trên 5 năm ~ dưới 7 năm ⑤ trên 7 năm ~ dưới 9 năm ⑥ trên 9 năm

7-5. Bạn bao nhiêu tuổi?

- ① the 20's ② the 30's ③ the 40's ④ the 50's ⑤ the 60's

7-6. Trình độ học vấn của bạn?

- ① Tốt nghiệp tiểu học ② Tốt nghiệp trung học
③ Tốt nghiệp phổ thông ④ Tốt nghiệp cao đẳng hoặc đại học.
⑤ Tốt nghiệp sau đại học (thạc sĩ, tiến sĩ...)

7-7. Bạn đã có con chưa? Nếu có, Bạn đã có mấy con?

- ① No ② Yes(người)



Cảm ơn bạn đã dành thời gian.